



CONTENTS

- 04 • 권두언**
인권과 복지의 시대, 21세기를 여는 충청남도 | 우주형
- 06 • 특 집 |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충남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과제 | 고승희
충남 장애인인권 실태와 과제 | 성태규
충남 노인인권 실태와 과제 | 김응현
충남 여성인권 실태와 과제 | 신혜지
충남 이주민인권 실태와 과제 | 이수철
충남 농업인권 실태와 과제 | 박경철
충남 어업인권 실태와 과제 | 김종화
- 38 • 충남논단**
바람직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 | 이상진 · 김영일
충남의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지역의 경제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 기반해야 | 임재영 · 이종윤
태안군 여촌체험마을 재방문의향에 관한 연구 | 김종화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로서 계룡시의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 | 고승희
- 70 • 충남 마을 기행**
천안 미나릿길 벽화마을 | 징봉희
- 76 • 열린마당**
이웃들에게, 자연의 작은 생명체들에게 친구이고저 | 조성미
부산형 도시재생산업·산복도로 르네상스 감천문화마을 | 권진휘
충남서터뷰 - 충남도의회 | 징봉희
- 116 • 해외리포트**
지역활성화와 자원활용으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구마모토현 방문기 | 송두범 · 박춘섭 · 홍은일
유럽의 농촌마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조영재
- 131 • 상생+갈등**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 홍수열
- 140 • 오피니언**
한국인 해외관광 유감 | 권오덕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충남에 던지는 시사점 | 이은애
- 146 • 충남 소식**
- 149 • 연구원 소식**
- 155 • 충남 문화유산**
종학당[정수루 · 숙사](宗學堂[淨水樓 · 宿舍])



우주형 |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장

인권과 복지의 시대 21세기를 여는 충청남도

지난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이 있었다. 이 날은 충남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10월 5일 충남도민의 날에 맞춰 행사일을 잡고(10월 5일이 공휴일이라 부득이 다른 날 열림), 도민의 날을 상징하는 105인의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을 모집·구성하여, 도민인권증진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이들과 함께 해서 ‘충청남도 도민 인권선언문’이 탄생되었다. 인권선언문은 전문과 본문 6장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충청남도민 인권선언은 ‘인권이 꽃피어나는, 전 인류를 향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청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이다.

충남은 2012년 도민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에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충남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민의 권리장전도 함께 제정하자는 뜻으로 ‘충남도민 인권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도 실시되었는데, ‘충남도내 인권존중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3 정도만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또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5 정도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대상으로 경제적 약자층인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여성 등을 꼽았고, 인권침해 발생원인으로 경제적 지위, 학벌, 성별, 나이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제 인권의 문제는 국가의 과제일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서도 중요한 지표로서 부각되는 시기가 되었다. 어쩌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지방자치가 실현해야 할 주요 가치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의 인권 신장인지도 모른다. 인권이 꽃피는 지역이야말로 가장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선 6기 지방분권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충남의 현재가 향후 달려 나아가야 할 미래 지향점은 바로 인권과 복지의 시대를 여는 21세기 충남을 만드는 것일게다. 인권은 더 이상 추상적인 화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을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복지의 실현과 무관하지 않다. 즉,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돈 보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권의 우선순위에 의해 돈이 쓰여지는 사회가 바로 인권과 복지를 아우르는 사회라고 본다. 인권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인권이 꽃피는 사회는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다. 돈 안드는 인권은 허구이며, 한낱 구호일뿐이다.

인권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기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의 바람직한 공동체적 사회 경제활동들은 인권을 누리는 과정이며 또한 인권을 누리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 현장의 필요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며, 이것이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민선 6기 충남의 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 것이 된다. 이 비전처럼 우리 충남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은 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경제적 약자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인권 차별의 장벽들을 허물어가는 것이다. 복지의 실현은 생존권을 비롯한 중요한 인권들이 보장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예산 정책에서도 인권과 복지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2015년부터 시작되는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 차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우리의 갈 길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권과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야할 길이며, 21세기 충남이 지향해야 할 언제나 새로운 과제이다.

충남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과제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아동청소년들은 부모 및 양육자의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 균형잡힌 발달을 하며 성인이 되어 사회와 공동체 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주요한 존재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권리와 보호받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남의 아동청소년인권의 실태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동청소년인권 정책

아동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와 특별보호조치로 나눌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 만들어져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두어 학교폭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로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요보호아동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의 제3조와 제10조에 요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개념 및 조치사항

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요보호아동의 보호 정책을 관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장애 아동·청소년의교육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이들이 교육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로는 드립스타트 사업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표준형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약물남용방지 대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주관 사업과 대한보건협회의와 금연운동협의회로 대표되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단체나 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4)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대안학교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안학교 이외 미인가 대안학교도 존재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학교 법적 근거를 설립한 것과 더불어 각 부처별로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5) 특별보호조치

근로청소년의 특별보호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의 5장에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62조에 근로청소년의 최저연령과 취직인허가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착취 및 학대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의 실태

1)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실태

대부분 학교의 규율과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쟁점과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법률 등에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보호 연령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참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참여율이 저

조한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와 헌법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며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과 학교 폭력의 존재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실태

정책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 시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적어 가정위탁, 입양 가정 등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주양육자인 부모에 의한 학대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제공해 줄 뿐, 평가인증 사실이 보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3)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실태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애아 통합교육의 비율이 높지 않으며 건강 및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인 종류와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보내는 아동·청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보호자 부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의 원인은 학교 성적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여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성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생물학 강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성에 대해 배운다는 명목으로 성인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관념들을 갖게 되고 청소년 임신 문제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약물예방교육은 해악에 관한 지식이나 부정적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생활기술이나 보호요인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미약하여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빈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의 해소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 실태

아동·청소년들이 친화적 인권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며 과거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경제의 빈곤과 일탈행동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자발적 중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탈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 활동은 학업과 연계된 활동이 중점이 되고 있어 자발적 문화활동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특별보호조치 실태

연소자 근로조건의 법위반 사례의 증가는 관리감독의 소홀과 법에 대한 미흡한 홍보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적 착취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약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

충남의 아동청소년인권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충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아동청소년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인권보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인권보장시스템도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키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가출 등 가정에서 이탈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대안양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청소년 발달권 보장 및 모든 아동의 기초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의 생존과 발달권을 보장하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원방안을 강구하며 통합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을 포함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보건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적 활동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업중단 및 이탈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진로직업관련 교육기반을 구축하며 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권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 장애인인권 실태와 과제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인권취약계층이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권취약계층마다 각각의 인권침해·애로사항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인권개선과제도 달라진다.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지녀야 한다.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는 장애인인권의 내용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글에서는 모두가 알아야 할 장애인인권의 항목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충남 장애인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장애인인권의 항목

장애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둘째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셋째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1)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장애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홍보,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의 인권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인권항목으로는 ①장애인의 접근성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많은 물리적, 정신적 벽이 상존하고 있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한 시설의 종류와 대상 등을 중앙부처별로 이행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접근성에는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의 세부 인권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②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이다.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③장애인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이다. 복지는 생존권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가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④관련 자치법규 정비이다. 장애인인권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조례·규칙을 통해 구현된다. ⑤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인권실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사

업·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한 과제이다. ⑥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권의식은 장애인인권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더불어 장애인 자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 ⑦장애인인권 대응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안에 접수와 상담,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2) 실질적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평등권(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자유권(신체의 자유,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청구권(국가대상 일정한 청구 권리), 참정권(선거권, 공무 부담권, 국민투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세부 인권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주거권보장 : 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여부 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턱과 같은 집에서의 원활한 휠체어 이동문제를 포함한다. ②건강권 보장 : 장애로 인한 운동부족 등 이차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장애인의 건강문제이다. ③교육권 보장 : 학령기 제도권 교육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 사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직업, 평생교육문제를 포함한다. ④소득보장 :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및 자립생활 영위를 위해 근로, 장애인고용, 최저생계비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⑤문화권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여가 활동 등도 기본권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항목이다. ⑥장애인가족 지원 :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의 인간적 삶도 보장되어야 한다. ⑦장애여성 지원 : 장애인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권문제 이외에 모성, 성피해 등 여성이기에 갖는 인권항목이다. ⑧장애아동, 발달장애인,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원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지속되는 장애인의 인간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항목이다.

3)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접근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장애인이 직접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자립생활은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인의 보호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삶의 과정에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①자립생활·활동지원 확대 :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면서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로서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내 인권보호 및 시설인권 피해자 보호대책 : 장애인시설내 입소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장애인입소자 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를 포함한 사항이다. ③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항목이다. ④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장애는 병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시설에 격리되어 보호감찰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인권의 실태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장애인은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사회적 기반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접근권이 제한되어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주지역, 거주시설, 민간시설에는 아직도 장애인 주·정차를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미비하고, 장애인차량 주차단속이 이분화되어 있는 등 행정지원 뿐만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인권 의식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거리·시간규제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정보접근성이 배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및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찰서에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경찰관련 업무를 문자를 통해 대화하는 농아인은 충분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여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장애인당사자와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기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사업은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접근권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과 저하력 장애인 중심으로 이용자중심의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고, 장애인 인권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이 상존하고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2)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있으며,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과 후유증상 등으로 인한 2차적인 건강·보건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은 비장애인에 준하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농·어촌지역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이 먼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한된 교육권은 장애인의 능력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취약한 정보접근권의 원인이 되고 있다. 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이 부족해서 장애인은 평생교육의 대상자 선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성인은 교육청 등과 연계되지 않아 정보접근에 제약이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활동보조가 주어지고 있지만, 주중에 주어진 시간에

만 보조하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는 가족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탈진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

노동권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필수권리이다. 장애인은 근로, 고용, 최소생계비 등과 관련하여 비장애인과의 차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에서의 노동소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학력, 경력보유 지체장애인은 오히려 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여가활동도 제약되고 있다. 이동권의 제약, 정보와 기회의 부족 등으로 문화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모적인 오락·문화행사에 전비용으로 장애인을 동원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장애인으로 인한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도 열악한 상태이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기초수급자 불인정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하다. 유형별 장애의 애로사항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상태이다.

3) 자립생활 패러다임 전환은 아직도 요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경증장애인 위주로 지원이 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이 미흡하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립생활센터 지원에서 충남은 미흡한 상태이다. 시설내 인권보호와 시설인권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주시설의 종사자와 장애인 대상 인권교육도 미흡하다. 장애인보조기기의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 충남은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시설장애인이 아직 많은 실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주거, 체험휴, 기술훈련 등의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

장애인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권증진을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접근권(편의시설, 이동권, 정보접근권)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편리를 도모하고, 민·형사사건 등에서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를 접근권이 더 필요한, 더 소외된 장애인 중심의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중도·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여 장애인의 주거권을 신장하고, 의료·보건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농·어촌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병원으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자

● 특집2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령기 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인의 교육권을 개선하고,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학력(경력단절) 장애인의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편견, 정보와 기회의 부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여가 향유권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여 가계운영과 개인생활을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예방·보호조치를 확대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체험 홈, 주거 등의 실질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 특집3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충남 노인인권 실태와 과제

김용현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경각심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전까지 실제적인 노인인권에 대한 접근은 노인차별이나 학대,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기본권적 몇몇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노인학대'의 신고, 조사, 보호 등에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제한된 영역 이기는 하나 노인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내 인권 의식의 성장과 그 배경에 힘입은 바 크다.

1990년대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되고, 관련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가 설립되는 등 '인권의 세계화' 현상에 동참하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국가인권위원회, 2006)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서 노인에 대한 인권 신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보장을 노인 인권 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충남지역 노인인권의 항목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충남 노인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인권의 항목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통한 노인인권 확립 둘째,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을 노인인권의 항목으로 뽑을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통한 노인인권 확립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각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

계는 방입, 자기방입, 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는

①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을 보장받는 방안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권이 보장이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을 보고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강화이다.

전체 노인학대의 상당부분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감독이 인권적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은 보호를 받는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며 종사자의 인권은 논의되어지지 못하였다.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인권이다.

③ 노인인권 상담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인권의 특수성은 사회의 인식 및 관심이 부족하고 노인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인권에 대한 상담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노인인권의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노인의 경우, 노인학대같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가해자 역시 인권 침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인 중 절반 이상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빈곤문제와 더불어 노인인권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독거노인과 의존노인의 인권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① 독거노인에 경제적 지원과 건강문제, 정서적 문제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로까지 이어져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

② 의존노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

고령 및 장애가 있는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의 영위가 힘들게 되므로 타인에 의존하여 가사 및 활동, 간병 등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돌봄과 관련되어 노인의 의견과 요구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③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근로자의 근무환경, 임금, 노동시간에 등의 인권유린이 방지되어야 한다.

노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가 부족하여 노인의 근로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시장에서 노인들은 연령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으로,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고 노인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및 근무환경에서 열악하다.

노인인권의 실태

상기에서 살펴본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노인이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고찰해 보자.

1)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통한 노인인권 확립

노인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시설입소시부터 야기된다. 시설입소시 대부분 동의서를 동반가족에게만 받고 당사자인 입소대상 노인에게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전무하여 인지능력이 결여된 노인의 경우 문을 잠궂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바깥공기나 햇빛을 제대로 쬌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활시설의 경우 4인 또는 6인실의 공간들이 많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고 입소노인에게 서비스의 개별화가 존중되지 않는다. 또 목욕케어가 힘들다는 핑계로 기관을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입소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목욕서비스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일면식없는 목욕봉사자의 서비스로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운영자의 인권 감수성도 문제이다. 노인의 복지를 이끌어야 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의 인권을 억누르는 간접 가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입소노인에게 친하다는 주관적 판단하에 모든 말투가 반말인 주 케어자도 인권유린의 주범이다.

또 노인학대 유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안되는 직원에게 인권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를 부탁하는 것 역시 무리인 경우이고 노인생활시설에서 학대예방지침에 대한 보건복지부차원의 종사자의 교육이 소홀하거나 전무한 것도 인권유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관련 상담창구가 미흡한 것도 문제가 된다. 노인전용 상담 창구가 없어 노인의 인권 등 전문상담 기관이 없거나, 있어도 실적위주의 사업만 전개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여 노인학대가 신고되지 못하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하는 방치된 노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미흡도

절실하다.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여 홀로 고독사를 맞는 노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범 도민적 대책이 미흡한 것 또한 현실이다.

독거노인 뿐만아니라 의존노인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돌봄서비스가 보편화되었지만 장기요양 인프라가 밀집되거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립이 되거나 서비스 경쟁에 의해 질적인 수준도 향상되는 반면, 시골지역일수록 본인이 살던 지역을 떠나거나 자녀가 지정해준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등 입소노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2)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빈곤과 가족간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복지체계가 전무하여 일하고 싶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미흡하다.

또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되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직종별로 점검하여 노인이 충분한 조건하에서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인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창출 역시 시군별 시니어클럽이 1개소로 제한되어 있어 시니어클럽 형태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미흡하고 시니어클럽역시 단순히 일자리 개수 늘리기의 사업으로 명실상부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없는 단순한 일자리갯수 늘리기에 동참하기 보다 노인을 최소한 세 분류 (57세~65세 young-old, 66세~75세 middle-old, 76세~이후 old-old)로 세분화하여 고령 인력 적합 직종을 재편성해야 노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전개를 더욱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직종 등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적합직종을 개발하고 1% 의무고용률을 제정하여 노후의 소득보장 및 자아실현을 범국가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요구된다.

결론

상기에서 충남 노인인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충남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중심으로 본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방안으로 시설입소 이전과 이후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노인인권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충남도 자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의 빈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군별 일률적 형태의 시니어클럽 지원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직종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정책 선회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제고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효사상의 퇴조와 더불어 노인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주변부 인생으로 전락해 있다. 게다가 노인차별주의(aging)라는 말이 시사하듯 노인은 단순히 연령만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미래의 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의 주를 이루는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시각의 교정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당사자, 공무원(소방, 행정), 사회복지종사자 등 노인서비스에 관여하는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청소년, 일반 성인에 대한 공정심과 효사상, 노인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중과 노인에 사회통합의 발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 여성인권 실태와 과제

신혜지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은 사적인 공간에서 경제, 문화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고 있으나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 경제, 범죄 등 영역에서 여전히 여성의 인권수준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충남의 여성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여성인권의 항목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셋째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넷째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이 요구된다.

1)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

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등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서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해자의 교정치료, 성매매 범죄인식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및 사회적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

여성소수자 정책 강화를 위해서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지원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여성소수자의 권리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4)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

여성의 경제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일 가정양립지원 정책, 여성 농업인,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성인권의 실태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여성이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금지 및 성평등실현 기반 미비

충청남도는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으로 가부장성이 강하고 대중여성들, 도민 전반의 성평등,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도민이 대다수이다.

또한 성인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 및 환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성별분리통계가 미비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여성들의 정치, 사회참여 수준이 낮다.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평균 중 19.1%가 여성이지만, 우리나라 여성 선출직은 7%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광명 33%에 비해 충남 18%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적으로도 충남이 더 저조한 편이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대처 및 지원 미흡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의 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규모 강의 중심, 보수적인 교육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식제고의 실효성이 낮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쉼터와 같은 공동시설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가정 생활과 같은 형태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가해자 문제가 매우 중요하나 교정치료 등이 미약하다. 현재 복권기금에 의해 보호관찰소 관리하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제 치료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성폭력은 범죄화 인식이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 사회현실과 유사성매매업 등이 지역 곳곳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3) 여성소수자 사회적 배제 대책방안 미흡

지적, 정신, 발달 장애인들이 성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성폭력을 당했을 시에 임시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의 부녀회장, 이장 등 1:1 상담 및 지속적인 가정방문 등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충남의 특수학교 6곳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도 부족하다.

다문화가족은 멘토-멘티 제도를 많이 맺고 있으나 부녀회, 새마을지도회 등 마을 회의 논의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 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현재 경찰과 교회에서 지도·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듯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 대책방안이 미흡하며 여성소수자의 지원체계가 파편화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여성의 경제참여권 취약

충청남도는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미비하다. 충남지역은 고학력 여성경제활동률이 낮는데,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이 제도화되어 있고,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취약계층여성들이 종사하는 직종(비정규 저임금직)에서는 지원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사회에서 여성 농어업인은 그 역할에 비해 2차적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농어업에 대해 공동으로 경영하고 노동하지만, 대표성은 대부분 남성(남편)에게 주어지며, 재산권도 매우 약한 실정이다. 농어업인을 위한 교육 등에서도 남성에 비해 수혜율이 매우 낮으며 여성농어업인 가구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여성농어업종사자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 농어촌 지역에 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빈곤문제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미흡하다. 특히 여성고령 농어업인이 증가되고 있어 의료비 지원, 생활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이 대다수인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이외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중 성희롱 등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은 계속 확대되고 그 요구도 폭발적일 것이다.

결론 및 정책제언

여성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별금지 및 성평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성인지감수성 교육, 인권교육에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도민이 대다수이므로 주기적·구체적·단계적으로 양성평등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어 성차별의 양상을 드러내고 정책개선안들이 환류되어 정책제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서는 현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은 뿌리 깊은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므로 항시적이고 예방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 및 가족까지 통합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재발방지와 함께 가해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확대 및 사회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업, 인신매매 등과 얽힌 사회구조적인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여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성소수자 등 여성소수자의 보건·복지지원 및 자립역량을 높여야 한다. 여성소수자들은 여성이면서 소수자라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소수자의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며, 마을단위에서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의 실질적 경제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및 양육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농어촌사회에서 여성 농어업인의 높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재산권,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고해야 한다. 고령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노동, 사회서비스노동에 대한 요구는 계속 확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열악한 노동환경분야이므로 치우개선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충남 이주민인권 실태와 과제

이수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99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이주민들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종, 민족,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혼합되어 살아가는 본격적인 '다인종·다민족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이주민들을 단지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고, 이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충남의 이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민 인권의 실태

현재 충청남도의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처해 있는 인권의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물론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주민들의 양적인 증가와 구성의 다양성으로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우선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편의상 이주민들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1) 이주민의 안정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입국 전, 그들이 생활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한국과 작업장, 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채로 입국하여 한국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익숙하지 못한 일로 인해 작업장에서 산재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초기의 중매업소를 통한 1(남성) 대 다(여성)의 반인권적 결혼은 많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남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형

편이다.

이들은 입국 전의 정보의 부족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한 기본 정보제공 및 교육의 부족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3일 간의 교육만 받고, 각 직장으로 이동하여 기본적인 직업 훈련 없이 바로 작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나 언어를 교육하여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의 미비하여 결혼 후 시댁이나 마을 주민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주민들은 입국 전후의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해 겪는 생활의 어려움 이외에도, 우리사회에 정책해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민간의 제도와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자의 경우 여전히 임금체불,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공공 및 민간단체(NGO)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생활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은 그들이 살았던 체제가 우리사회와는 다르고,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도움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수동적인 생활자세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의 복지사들은 법률·행정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한 체제 및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로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 난방 제한, 온수 사용 제한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비 취약 등 여성의 안전 고려하지 않는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편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의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숙소로 비닐하우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낮설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무엇보다 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이주노동자이거나 이주 여성의 경우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제도를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기본적인 병원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건강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임신이나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 및 육아에 필요한 필수적 진료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인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용이 상승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들은 체류의 안정성과 기본적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직장을 옮기고자 할 때, 고용주의 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를 견뎌야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고용 허가 기간 이후 재계약 절차가 복잡하여 재입국의 불안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불법채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1년~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차별적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사회의 이주민들의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전과는 다르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는 많이 사라졌으나,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인종차별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열등한 국민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식은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육체적 폭력 문제는 많이 줄었으나 상시적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히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으나 비자 문제 등으로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침해 이외에도 이주민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 문화, 특히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학제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해 교육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주민 인권의 항목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첫째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둘째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1)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기반조성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입국 전후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회 적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 제공, 한국 생활에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입국 전후 한국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작업장이나 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일을 시작하여 산재위험이 높고, 이는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할 남성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매업소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전후 한국 작업 환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② 입국 이후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산재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직장 내 폭력 예방에도 효율적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의 문화와 언어 교육은 시택이나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충남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인간다운 거주환경의 마련, 둘째 건강권의 보장, 셋째 체류 안정성 보장, 넷째 자립역량 강화, 다섯째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로운 기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다운 거주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부적절한 숙소와 숙소사용에 대한 과당 요금 징수, 난방 및 온수 사용 제한, 기본적인 경비 부족 등의 문제는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 내 이주민들의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②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의료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병원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많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신분상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구축된 의료지원 제도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 혹은 확대를 통해 이주민 건강권 확보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 ③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및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비자 연장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고용 허가 및 직장 이동은 복잡한 절차의 문제로 체류 안정성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불법체류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지역차원에서 체류와 고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이주민의 안정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이주민의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재, 신분상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결혼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역시 경제적 곤란의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우리사회의 일원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 즉 노

동자들의 체불, 산재 등의 대응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직업 교육 및 알선 제도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⑤ 차별과 폭력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주민들 육체적 폭력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언어폭력 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종교(특히 이슬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한국은 이제 다양한 인종, 민족,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인종·다민족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세계화로 인한 이주의 증가라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고, 결혼이주여성과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한국계 외국인의 유입이라는 우리만의 특수한 현상이기도 하다. 어찌되었든 이제 이주민들은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시기에 혼란과 갈등을 제어하고, 사회통합과 질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충남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과 구체적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주민들의 인권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주민들이 처한 인권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충남의 이주민 인권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첫째 인간다운 거주환경의 마련, 둘째 건강권의 보장, 셋째 체류 안정성 보장, 넷째 자립역량 강화, 다섯째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로운 기본권의 보장 등의 영역에서 세부적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기본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으면, 우리사회와 충청남도도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충남 농업인인권 현황과 과제

박경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가장 귀중한 것은 그 인륜(人倫)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군신(君臣)과 부자(父子)는 인륜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다.(중략)

그런데 지금의 신하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봉록과 지위만을 도둑질해 차지하고 성상의 총명을 가리우고 갖은 아첨과 아양을 부려, 충성되게 간하는 선비를 가리켜 요망한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匪徒)라고 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에게 사납게 구는 관리만이 많아서, 인민들의 마음이 날로 더욱 변해 가고 있다.(중략)

우리는 비록 초야에 버려진 백성이지만, 임금의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니, 앉아서 위태로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온 나라가 마음을 같이 하고 억조창생(億兆蒼生)이 의논을 모아 이제 의기(義氣)를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바이니, 오늘의 광경은 비록 놀라운 일이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각각 그 생업에 편안하여 다 함께 승평(昇平)한 일월(日月)을 빌고, 모두다 성상의 덕화(德化)를 바랐으면 천만 다행이겠노라.

-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중에서 -

위의 글은 1894년 갑오년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 초창기 전북 무장의 구수내에서 동학군의 영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이 발표한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이다. 이 포고문은 조선말기 무능하고 부패한 조정, 탐욕과 학정을 일삼는 관료, 호시탐탐 조선의 침략을 노리고 있었던 청나라와 일본에 맞서 조선의 농민들이 왜 자주와 자치를 표방하고 혁명의 깃발을 올려야만 했는지를 구구절절하게 담고 있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이 그해 11월 공주 우금치전투를 기점으로 혁명의 깃발은 내려지고 참혹한 희생이 뒤따랐지만 따지고 보면 이 혁명은 우리나라 최초로 농민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간된 권리를 만천하에 표방하고 투쟁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인권선언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농업과 농민이 처한 현실

사실 '농업인 인권'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다. 우리사회에서 보통 인권이라고 하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말한다. 여성(1979), 어린이청소년(1989), 이주노동자(1990), 장애인(2006) 등은 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의 대상계층이다. 한데 이제 농민, 즉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도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오늘날 농민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이 120년이 지난 오늘날에 다시 선포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산업화와 소위 근대화 과정에서 농산물가격은 도시민과 도시근로자를 위한 물가안정 차원에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고 도시와 산업의 팽창으로 농촌의 토지는 잠식당하고 농민은 서둘러 농촌을 떠나 도시노동자로 변신해야만 했다.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농업과 농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그동안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 또한 별 실효성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산물 시장개방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 한·EU FTA에 이어 우리나라 농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FTA가 타결되고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FTA 타결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농산물 수출국가와 계속 FTA를 추진한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 특히 소농들은 이제 농업을 통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토지를 일구고 생명창고를 지켜야 할 농민은 이제 시장개방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떠밀리고 거대한 상업자본과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황막한 들판에 내몰리고 있다.

3. 농민인권선언의 배경

2012년 9월 세계인권문제를 총괄하는 UN 산하 세계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농민인권에 관한 중요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세계농민과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차원의 선언문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전 세계 농촌인구는 줄었지만 아직도 인류의 3분의 1이 농민이고 이들 대부분은 가난한 개도국에 살고 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가난과 영양실조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 때문에 UN 차원의 농민인권에 관한 결의안 통과를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오히려 가장 험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다 결국 병마로 쓰러져가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이제 UN 세계인권이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이다.

전 세계 기아문제를 국제 정치경제적 구조와 질서의 문제로 다뤄 주목을 받았던 장 지글로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책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듯 오늘날 농민들의 가난과 굶주림은 정치의 문제이며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탐욕과 이를 묵인하고 지원하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패착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UN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또한 UN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UN 세계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농민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실무그룹을 통해 농민인권선언문을 작성하는 데에는 개도국들의 소농과 농민자주권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소농연대인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 농민의 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비아 캄페시나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와 초국적기업에 맞서 개도국의 소농들이 연대해 만든 국제농민연대이다. 이들은 WTO와 APEC 등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국제회기 개최될 때마다 회의장소에 집결해 자유무역에 맞서 강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들이 국제적인 기구 차원에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FAO(세계식량농업기구)와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에 농민권리 보호에 관한 권리 규정을 강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농민권리헌장을 UN 차원에서 제정해 선포할 수 있도록 '입법 투쟁'을 병행했다.

그 결과 UN 세계인권이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농민인권선언을 연구했고 2013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 첫 번째 세션에서 의결된 농민인권선언(초안)(정식명칭: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은 대부분 비아 캄페시나에서 주창한 농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Women and Men)을 수용해 작성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농민인권선언문을 UN 세계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올해 가을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정식적으로는 공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농산물 수출국가와 초국적기업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UN 차원에서 개도국 농민, 특히 소농과 전통농업의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농민인권선언'이 공표될 경우 농업선진국들과 초국적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는 UN 농민인권선언의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 5조 종자, 전통농업지식, 실행에 관한 권리

1. 농민은 그들이 심기를 원하는 다양한 종자의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경제적, 생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작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농민은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에서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그들 자신의 생산물과 수집물 그리고 농업, 어업, 축산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그들 자신의 기술과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의 필요로 그들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8. 농민은 그들 자신의 수확물을 기르고 발전시키며 그들의 종자를 주거나 판매하는 등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분명 개도국 농민들이 자신의 농업방식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농업다국적 기업의 개도국 농업진출에 큰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UN 차원의 농민인권선언에 반대해 최종 선언은 보류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농산물 수입국들이 이 농민인권선언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토지에 대한 국가 보호의무와 농민의 토지보호권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농민에게 토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농민이 토지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역사 이래 대부분의 농민봉기는 국가와 각급 행정기관 그리고 자본의 강압적인 토지의 수탈로부터 발단이 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져온 밀양송전탑문제와 각종 개발지구에서의 농민들의 저항은 토지보호권에 대한 농민의 강력한 의사표현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농민인권선언 4장에는 농민의 토지보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제 4조 토지와 영토를 보존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주거와 영농을 위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토지를 애써 가꾸고, 그들의 토지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을 하고, 어업을 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의 생활을 위해 남겨놓은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삼림과 어장을 보호하고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 농민은 그들의 토지와 영토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관련 농민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와 통보 그리고 승인 후 공정한 보상과 선택이 없다면 어떠한 이주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6. 농민은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대토지소유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토지는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토지소유 제한제는 토지소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되어야 한다.

4. 핵심이 빠진 대책들

우리나라 농정에서 '농민인권'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정책은 아직 없지만 그동안 농민인권에 준하는 정책이 실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은 2005년에 수립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05-2009)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농업시장 개방과 도시화로 인해 갈수록 소외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04년 3월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관련 법에 의거해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농림부가 실무를 맡으면서 농어촌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어업인의 의료, 복지, 교육, 주거환경,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복합산업 등을 대폭 향상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2009년에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제2차 계획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 중의 하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제정해 정책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기준은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31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와 지자체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구축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에 관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충남도에서도 <기본계획> 수립해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충남도가 올해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면서 농업인 인권 분야를 포함했고 지난 10월 14일에 선포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농어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조 농어민의 권리

-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처럼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 번째 수립하고 있고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어민의 권리 선언'을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포함하고 있지만 농민, 농촌,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본계획>과 '농어민의 권리 선언' 어디에도 최저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없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농산물 파동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수매제와 같은 제도는 요원하기만 하다. 더욱이 쌀시장 완전개방 선언과 최근 타결된 한·중FTA로 농민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 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5. 맺으며

1894년 갑오년에 동학농민군은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사상과 보국안민과 척양척왜를 구호로 동학혁명의 깃발을 올렸는데 1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분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도시자본의 농촌 침투로 인해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농민들은 “사람이 하늘이다” 이전에 “농민도 사람이다”라는 구호를 먼저 외쳐야 할 만큼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농민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민의 터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농촌마을은 고령과소화로 비어가고 있다. 명칭과 목적이 복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불분명한 정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농민의 인권차원에서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고, 충남도 <충남 도민 인권선언>의 ‘농어민의 권리 선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기본소득에 준하는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선언도 120년 전처럼 분노한 농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충남 어업인인권 실태와 과제

김종화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어업인 수는 약 147,300명으로 국내인구 비중의 약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충남 또한 21,375명으로 약 1%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어업과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업군으로서의 어업인의 사회적 지위도 약화시키고 있다. 또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그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삶의 질은 곧 어업인의 권리이며, 이는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의 인권이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어업인인권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태를 파악하였다.

어업인인권 항목

어업인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1)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2)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이 요구된다.

1)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

어업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정주여건 및 접근성이다. 어업인의 정주여건 보장은 어업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낙후된 교통과 통신망에 의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 ② 사회적 갈등이다. 행정과 어업인간의 갈등, 어업인과 인근시설간의 갈등, 어장을 둘러싼 어업인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산재해 있다. ③ 인권교육 및 정책의 부재이다. 어업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부재, 인권과 관련된 정책이 미비하다.

2) 실질적 기본권

어업인의 실질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주거권과 건강권이다. 어촌에는 주택과 기반시설이 낙후되었고,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 ②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여가이다. 어촌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없고, 주민들이 문화·예술·체

육·여가에 소외되고 있다. ③ 열악한 근로환경이다. 어업인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소득, 열악하고 거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④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이다. 어촌의 다문화 가정, 여성 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못하다.

어업인인권의 실태

인권항목별로 충청남도 어업인은 인권적 측면에서 갖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사회적 기반

어업인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반사항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고립성을 갖고 있다. 어촌의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이동성, 접근성의 제약이 발생한다. 어업인의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기반정비사업 등과 같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또 주민들의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다양한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② 사법 및 행정절차상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어업인은 행정당국과의 마찰, 농업인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다. 어로행위 단속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집행상의 마찰, 어업권 취득과 어로활동 상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마찰에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지원과 비교하여 어업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느끼고 있다. ③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어업인은 인근지역 시설과의 갈등, 해상사고, 어장을 둘러싼 경쟁구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이 부족하여 어업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④ 인권교육과 인권정책이 부족하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어업분야의 모든 주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

2) 실질적 기본권

어업인의 실질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주거권이 제한적이고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어촌에는 고령인들이 많으나,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주거공간은 부족하다. 또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혜택도 충분하지 못하다. ②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예술·체육·여가시설이 부족하다. 어촌 아이들을 위한 쉼터, 놀이터, 방과 후 교육 등이 부족하여 보호받을 권리, 놀 권리, 배울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도시와 비교하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여가에 대한 시설 및 프로그램도 부재하다. ③ 노동강도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거칠고 생명이 위협적인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지 않다. 그리고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도시근로자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④ 어촌의 다문화가정과 여성 어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하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그리고 여성 어업인의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결론

충남 어업인 인권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어업인 인권에 대한 의식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어업인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인권을 교육을 통하여 인지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업인 본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오지 어촌의 의료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어촌이탈 주민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향후 어업·어촌의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 될 것이다. 자원이 감소하고 수입수산물도 증가하고, 어업경영수지의 적자가 심화될수록 어촌이탈주민은 증가하고 어업종사자들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어업·수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수산물 식량주권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그것의 첫 걸음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권증진일 것이다.



바람직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

이상진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일 | 물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1.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공공수역의 하천과 호소에서 수량이 부족해지는 갈수기에 유기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고, 같은 시기에 물의 이용량이 많아 수량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하천과 호소가 오염되면 인간의 건강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의 물 환경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집행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하여 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4대강을 중심으로 주요 항목별(BOD, T-P)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기준유량 이상의 유황조건에서 목표수질 이하로 유지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구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이 전체의 약 60~7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어 비점오염원의 배출량을 줄여야만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책기조와는 달리 실제로 하천의 수질농도를 높이지게 하는 원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제도의 개선 없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설치된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수질농도가 높아지는 평수기 이하의 유황조건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비점 발생 및 배출부하

※ 본 글은 충남발전연구원 기본과제의 일환으로 대한환경공학회지에 출간된 논문(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선정 및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대한환경공학회지, 36(10), 719~723, 2014)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량 산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선정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질오염원의 분류

‘수질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수계 내 수질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준다하더라도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지 않고 나빠진 자연상태는 수질오염이라 할 수 없고, 둘째는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수질오염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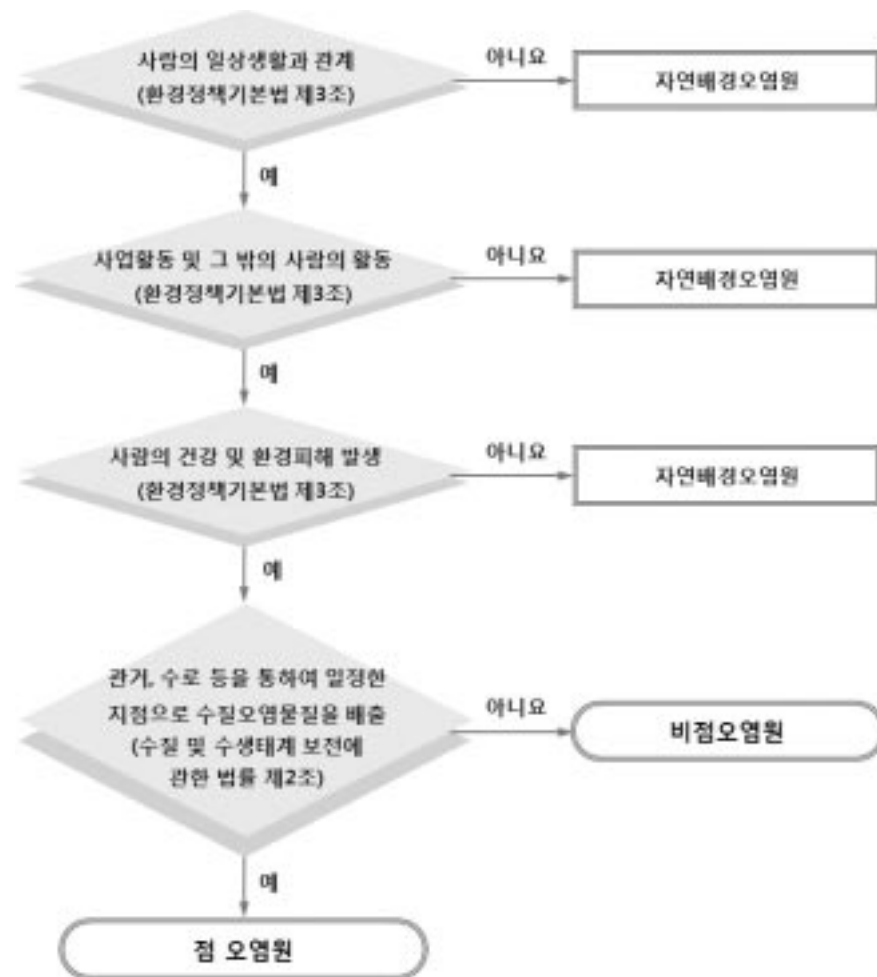
반면,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총 53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즉, 관거 및 수로 등으로 배출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점오염원이지만 법률적 정의에 의해서는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정의에 기초하여 정리해보면,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53종의 수질오염물질이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 사람의 건강 및 환경피해를 주는 상태를 수질오염이라 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이 관거 및 수로 등 일정한 지점으로 배출되는 여부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점오염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형태로 유역에 배출된다고 해서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유역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지 않고 자연에 의한 오염으로 피해를 발생하거나,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 초지, 하천 등은 비점오염원에 포함하지 않고 자연배경오염원(natural background pollutant)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환경청

1)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총 대장균군, 망간과 그 화합물, 바륨화합물, 부유물질, 브롬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산과 알칼리류, 색소, 세제류, 셀레늄과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아연과 그 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물질, 유기용제류,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인화합물, 주석과 그 화합물, 질소화합물, 철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불소화합물, 페놀류, 황과 그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1,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폴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EPA)에서 이미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이외에 자연배경오염원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도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 발생하여 저감이 가능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저감이 불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오염원 삭감에 있어서는 자연배경오염원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토지이용현황에서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된 지목 가운데 임야,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 등을 자연배경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참고로 현행 법률적 기준에 의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분류하는 절차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현행 법률에 근거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분류

3. 비점오염원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강우 시 유역 내 비점배출부하량을 실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점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은 토지지목별 비점오염물질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된 일평균 발생량에 365일을 곱하여 연간 발생부하량을 산정한 다음, 연간 발생부하량 중 10%는 강우량이 없거나 10mm/일 미만 강우일에 배출되고 90%는 월별 강우배출비에 따라 모두 공공수역으로 배출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물질의 배출양상을 살펴보면, 발생된 비점오염물질이 실제 유역으로 모두 배출되지 않고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거나 식물흡수 등으로 상당량 삭감되거나 자정과정을 통해 일부가 잔존하다가 강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된다. 또한, 비점오염물질은 10mm/일 이상의 강우로 인해 실제적으로 유역에 연간 30~50일 정도만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부하량을 일일량으로 환산하여 비강우시에도 매일 배출하고 있다는 가정은 실제 유역에 배출되는 특성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일 발생량과 배출량이 같아지고 과대 계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비점오염물질 가운데 유기물과 영양물질 등이 토양미생물에 의한 분해, 광산화, 식물흡수, 지하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이 감소되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감소량이 없이 모두 1년 동안 강우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100% 유출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하는 관계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비점오염물질이 초기 강우에 의해 대부분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점오염물질 배출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산정식 또한 재검토되어야 하며, 셋째, 가축분뇨는 점오염물질로 산정한 다음 유기질비료 및 퇴·액비로 농지로 환원될 때 비점오염물질로도 산정되는 등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량을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우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량이 발생하는 10mm/일 이상의 강우일은 연중 약 30일 정도로, 365일 가운데 약 335일 정도는 비점오염물질관리가 의미가 없거나 관리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산정된 비점오염물질 전체량을 해당일수로 나누어 매일 배출된다고 가정한 계산식 또한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점오염원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에 있어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원단위의 수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도 강수량 및 지속시간에 따라 강수일의 총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강수조건에 따른 강우일의 배출양상과 공공수역의 유역특성에 맞는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선정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방안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우로 인하여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6가지 지정기준²⁾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는 현재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및 수원시 전지역, 골지천 유역 등 총 6개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자치단체에서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데,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은 하천 유량이 많고 수질농도가 높은 유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므로 강우 유출량을 포함한 하천유량의 증가율보다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율이 큰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조사·분석하여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이 커서 실제 공공수역의 수질이 나빠지는 지역에 한하여 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 시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가 중권역 목표(관리목표)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 유역 가운데 초지, 임야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지, 농경지 가운데 비점오염물질 배출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대부분 단위면적당 비점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이 많은 지역과 강우 시 하천 수질농도가 중권역 목표를 초과하는 유역을 대상으로 중권역 목표를 초과하는 시기의 초과배출량을 처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강우로 인해 하천의 수질농도가 중권역 목표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단위면적당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초과농도 지속시간, 처리의 실현가능성, 점오염원 대비 처리비용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유역 내 위치한 호소, 저류지 등은 대부분 일정기간 동안 상류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저류시켜 실제로 하류에 비점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으므로 상류지역은 비점오염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제도의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출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⑤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5. 맺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비점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선정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질오염원의 분류에 있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학술적·법률적 정의에 기초하여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지 않고 자연에 의한 오염으로 피해를 발생하거나,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 초지, 하천 등은 비점오염원에 포함하지 않고 자연배경오염원(natural background pollutant)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점오염원의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발생원단위의 수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강수량 및 지속시간에 따라 강수일의 총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강수조건에 따른 강수일의 배출양상과 공공수역의 유역특성에 맞는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 시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가 중권역 목표(관리목표)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유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 유역 가운데 초지, 임야 등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지, 농경지 가운데 비점오염물질의 배출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반면,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은 대부분 단위면적당 비점오염원 발생부하량이 많은 지역과 강우 시 하천 수질농도가 중권역 목표를 초과하는 유역을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초과농도 지속시간, 처리의 실현가능성, 점오염원 대비 처리비용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유역 내 위치한 호소, 저류지 등은 대부분 일정기간 동안 상류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저류시켜 실제로 하류에 비점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으므로, 상류지역은 비점오염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제도의 전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환경정책기본법
 박상현 외, 2010,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선정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물환경학회지, 26(5), 761~767
 이상진 외, 2009, 충청남도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의 운영실태 및 설치방안-유기물(BOD5)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한영한, 2013, 강원도의 자연배경오염원 영향 분석 및 수질오염총량제 안전을 적용의 개선방안, 강원논총, 4(2), 61~83, 강원발전연구원
 환경부, 2007,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1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요령 매뉴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

충남의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지역의 경제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 기반해야

임재영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윤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 및 산업 정책의 필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충남 지역경제가 당면한 고유의 문제들을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 및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해당 지역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다'는 대단히 보편적인 문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산업활동을 포괄하는 지역경제는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속에 내포된 특성의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그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에 당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직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제학이라는 고유한 이론체계의 존재이유가 설명된다.

우리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발표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과 그들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해결의 대안이 대동소이함은 인식하고 있는 당면의 문제들 역시 유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역들마다 처해 있는 곤란함과 요구사업들의 우선 순위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커다란 이견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차별적이지 못한 정책이나 계획의 문제는 특히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선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육성안의 준비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들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선정하는 절차와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에 의해 제출된 여러 대안들 중 일부를 경쟁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다는 의심을 지우기엔 부족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관련된 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이나 계획에 포함된 사업내용들 역시 지역특성이 고려된 차별적인 것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충남의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지역의 경제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 기반해야



지역의 경제나 산업정책이 지역경제가 당면한 취약점은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잠재력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전략과 기술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전략달성을 위한 기술이나 사업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유무형의 인프라의 공급이나 부지제공, 그리고 지원책이나 규제 등의 내용들을 포괄하게 된다.

<표 1>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시장개입 수단*

수단 구분	정책 예		시행주체	
	목표	예시	공공	
			중앙	지방
통화공급 조절 (Monetary supply)	물가 및 국민생활 안정 /투자활성화	발권량 조절/기준금리 통제/기타	●	—
조세의 전가 (Taxation)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 개선 등	관세/직·간접세 부과	●	△
공공지출사업 (Government expenditures)	수요활성화 및 복지개선 등	재정지출 사업확대 (기반시설/산업단지 개발·공급 등)	○	○
시장정보 제공 (Information provision)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 통한 시장활성화	통계 및 관련 자료 정비 및 공개, 관련 불공정행위 제재 등	○	○
인센티브 제공 (Incentive provision)	시장환경 개선 및 참여촉진 등	보조금 지급정책/시장참여 촉진정책	○	○
규제 (Regulations)	공정한 경제환경 창출 통한 시장활성화	진입장벽 제거 및 완화/반독과점 정책/ 반시장교란행위 등	○	○
⋮	⋮	⋮		

* 지역에서 공공부문의 유형별 정책수단(사업) 예시는 3절의 <표 2>에 구체적으로 제시됨

산업활동 측면에서, 개별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종류나 그 정도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차별성 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과는 이질적인 특성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지역경제별로 산업활동의 유형과 그들의 성숙도가 차별적인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지역발전 도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성장동력의 선정과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 전략산업의 육성 및 발전전략과 그 세부내용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책이나 계획의 실현 수단인 개별사업들은 구체적인 재정지출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무형의 인프라의 공급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경제 내에서 요구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구체적인 경제 및 산업분석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산업활동의 양상과 요구되는 인프라의 종류와 그 규모는 차별적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들에서 제출하고 있는 성장동력 선정 및 전략산업 육성안들은 산업연구원(KIET)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국민경제 단위의 사례들이나 타지역의 사례



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거나 제한적으로 수정, 적용한 예들임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업활동을 포함한 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 통찰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지역경제나 산업활동에 대한 분석이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 경제 내 어느 부문에서 어떠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문의 대상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리 명목이라도 상식적인 전후관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차별성을 구체화하는데 필수적인 지역의 경제 및 산업분석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거의 획일적인 관행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분석을 위한 이론체계와 통계자료의 다양하게 발전, 정비되어 왔으나, 지역의 경제와 산업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의 단일한 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 예로 그동안의 지역경제분석은 지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특히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에 대한 정보는 시 사업체나 종사자 수 등의 제한적 자료 중심으로서 지역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구체적 인식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는 요원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의 모색과정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의심은 지우기 힘든 사실인 것이다.

결국 지금부터라도 그동안의 구태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와 그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작업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경제나 산업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대안들이 다른 지역에서의 그것들과는 다른 충남 고유의 구체적인 처방이 되었을 때,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들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략과 전술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이 문제는 결국 공공부문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분야와 그 정도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아무리 공들여 작업한 것이더라도 시행주체가 통제나 관리할 수 없는 전략이나 전술이 담긴 대안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지역특성의 파악은 데이터에 근거한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작업으로부터

비록 동일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개별 지역이 당면한 경제나 산업의 문제는 사회·문화·정치·지리·환경 등의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제 요인들에 의해 다른 지역들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러한 차별성에 따라 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를 구성하는 부문별로,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그 성과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부터 동일한 자원배분이나 재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나 계획의 성과 역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단순한 예를 들어,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중심지인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의 존재로 인해 수도권 지역들에 비해 지가나 토지임차료(land rent)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토지가격이나 임차료의 낮음은 만일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관련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비용의 절감으로부터 기업들은 다른 투입요소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가격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만으로 충남의 기업유치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인데, 상기 논리에 따르면 토지비용 절감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크기는 충남보다는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서 더 크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수도권과밀화 억제' 정책기조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수도권 연접지역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기업들의 유치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앞서의 토지비용 측면에서 나타난 가격효과와 더불어 정책적 의지와 같은 여타의 요인들도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앞의 토지임차료 예는 생산활동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민감한 변수이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서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앞에 언급한 토지를 포함한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 외에도 다양한 중간투입 원자재와 서비스, 그리고 각종 유무형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s)들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유형의 기반시설은 도로나 철도 등 교통 SOC들을 포함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며, 무형의 기반시설에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이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형태의 것들이다. 이러한 유무형의 기반시설의 범주구분 과정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적 자본(SC)에 대한 논의의 예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충남의 기업유치 성과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제환경 요인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히 어떤 측면들에서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요구된다. 수도권 기업들의 유치 외에 문제를 지역경제 영역 전반으로 확장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타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지역에 대비되는 충남 지역경제의 문제점들과 강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과 전술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활동별로 충남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부문에서 각각의 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된 경제통계 D/B와 관련 이론체계가 요구된다. 여기서 충남의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는 생산자나 종사자 수를 바탕으로 그 다소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경제 내 산업별로 그들의 생산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해로부터 그 논의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예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산업

활동 관련 통계자료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자료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지역별 산업별로 사업자 및 종사자 수와 파용자보수, 그리고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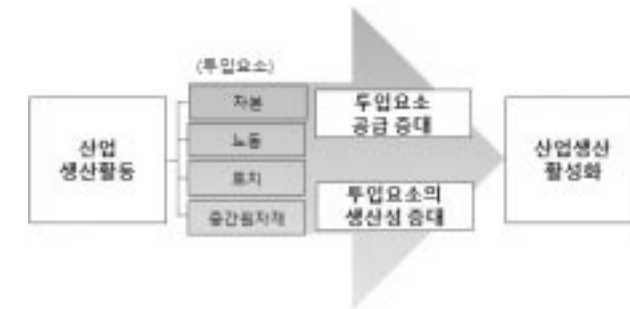
기존의 경우 충남을 포함한 여러 지역들에서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시에 지역별 사업체나 종사자 수를 기초로 하여 입지상(LQ) 계수를 도출하여 특정 산업의 상대적인 집적도에 대한 판단한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집적의 정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상대적 지표로 활용가능한 것이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진단에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만일 앞의 내용에 매출액과 파용자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우리의 논의는 지역별로 산업별 평균임금 수준이나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구체적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작업이 다른 지역과 산업들에도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변수들에 대해 지역간·산업간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결과에 경제학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 더욱 구체적인 정보의 도출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경제분석에 대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설명이나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통계D/B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개별 부문별로 충남의 강약점을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법들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지역경제 내 특정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나 R&D 수요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과 R&D 투자의 추가공급을 통해 대상 산업부문의 육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가능해진다. 특히 충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이나 유형별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면, 상대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제시될 수 있다. 이 때의 대안은 기초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정책이나 계획에 비해 그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은 제고될 것이 자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및 산업육성 정책은 체계적인 기초통계와 이론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는 결국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식 성장동력 선정과 정체성이 모호한 경제 및 산업 정책과 계획의 재현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제환경 분해와 정책예시

현실의 경제는 다양한 산업부문들로 구성되며, 기업과 가계,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상품과 생산요소의 공급과 수요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경제학의 생산자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축소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환경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단순해진다. 즉, 지역경제 내 산업별 생산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작업만으로도 지역경제의 제반 환경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림 1) 지역경제 내 산업생산 활성화의 개념도(생산자이론 중심)

지역경제 내 산업생산의 활성화는 (그림 1)과 같이 자본과 노동, 토지, 그리고 중간원자재 등과 같은 투입요소의 공급증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투입요소들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투입요소의 공급증대는 직접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 기업들로 하여금 투입요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투자자나 구직자들로 하여금 자본과 노동 공급을 통한 산업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산성의 문제이다. 생산성이란 투입되는 요소들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각 투입요소당 생산규모(평균생산성)와 투입요소의 증가분에 따른 생산규모의 변화분(한계생산성)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투입요소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입요소의 규모변화 없이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개별 투입요소에 대한 접근비용 절감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참고로 지역경제의 생산성은 지역 내 개별 투입요소들로부터 나타나는 개별 생산성들의 수평적 합이며, 투입요소별 생산성은 각각 차별적인 유무형의 기반시설을 요구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변수들, 즉 투입요소들의 공급과 생산성 등의 체계적 정리만으로도 충남 지역경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도출·정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값들의 지역간·산업간 비교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강점과 약점들은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며, 이 수치들을 집대성, 지표화한 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육성정책은 구체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부문의 육성을 위해 고유의 R&D 시설들이 요구되는 경우, 해외 선진 벤치마킹 대상이나 경쟁지역들에 비해 어떤 유형의 관련시설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단,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의 정책이나 계획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민간부문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으로서 충청남도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과정에 선행되어야만 한다.

〈표 2〉 변수 관련 정책 및 사업 예시*

목 적	대상 변수	정책		사업예시	사업시행주체			비고
					민 간	공공 중앙	지방	
투 입 요 소 의 공 급 증 대	자 본	직접투자			●			
		간접투자	기금운용	- 국민연금 이용한 국내 증시 개입 - 신용보증재단 운영		●	○	충남 신용보증재단 업무
			자본공급 주체 지원	- 관련제도 정비 및 정보제공 - 지원기관 설치·운영			●	
			조합활동 활성화	- 생산자 및 기금 조합 결성 지원			●	농어촌지역사회 단위
		대자본 접근성 향상	정보 제공	- 지역 내 투자환경 정보은행			●	충남경제진흥원 업무
			관련 조합활동 활성화 지원	- 지역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 지역사회 6차산업화 조합 육성지원				
			관련 금융상품 생산지원	- 지역 금융사-자금지원 MOU - 관련 인센티브 정비				
		투자유치	FTA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 Buy Korea - KOIRA(충남 해외사무소) 운용 - 지원제도 정비 및 관련정보 제공	○	○	○	
			국내기업 유치	- 국내기업 이전 보조금 지급 - 기업이전 지원 정보 제공 - 필요 인프라 및 용지 제공		△	●	
	노 동	간접공급	직접공급		●			
			노동공급 주체 지원	- 학교 운영 지원 - 산학협력사업 지원		○	○	도립대학/폴리텍대학/ 직업학교 등
			관련정보 제공	- 취업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 해외 산업연수생 관리 등	△	○	○	
			임금보조금 지급	- 지역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	재원조달
		직접공급	고학력·전문인력 대상 주거서비스 제공	- 고급·전문인력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학교 유치 - 관련 인프라 제공 및 정비	○	△	●	투자유치 및 산단 조성 사업과 연계(메카지화)
			간접공급					
	중 간 원 자 재	직접공급	간접사업	- 새단급		●	△	
			산업단지 공급	- 산업단지조성(지방 및 농공단지 조성) - 민간기업 전문단지 조성 지원	○	○	○	
		간접공급	계획입지 유도	- 계획입지전환보조금지급 및 세제혜택				
			직접공급		●			
	기 타	간접공급	시장교란행위 통제	- 관세율 통한 수출입 양 조절 - 법제도 정비		○	○	대형유통사영업일수제한
			벤류제인 구축 유도	- 생산자 협동조합 지원보조금 지급 - 관련 제도정비 및 정보제공 - 전문단지 제공			●	산단조성과 연계
	기타		통계정비 및 계획 수립	- 기초통계 정비 - 관련계획 수립		○	●	CDI 및 유관기관

(표 계속)

목 적	대상 변수	정책		사업예시	사업시행주체			비고
					민 간	공공 중앙	지방	
투 입 요 소 의 생 산 성 제 고	자 본	R&D 투자	대형 공공 R&D 투자	- (중이온 가속기 중심)과학비즈니스벤트		●		
			공공 R&D 투자유치	- 수소전지·자동차 기술상용화연구센터 - 해양수산바이오 연구센터 유치 등			●	T/P 및 CDI 사업기획 및 예타 대응작업 필요
			국내외 민간R&D 투자유치	- 관련 수요조사 및 기초연구 - 투자유인 제도 정비 및 정보제공	△	○	●	
			맞춤형R&D 공급체계구축	- R&D관련 필요기반시설 공급				
		기 반 시 설 공 급	교통 SOC	- 교통(철도 및 도로) 시설		●	○	도·CDI 사업기획 및 예타 대응작업 필요
			산업 활동 지원 인프라	물류인프라	○	△	△	
				에너지인프라		●	○	
				지역에너지 기반시설 공급 (예: 송전시설, 스마트그리드 등)				
				기타 인프라	△	○	○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지역사회·공공 공동추진
			지원제도 정비	용수 및 관개시설 등 공급	△	○	○	
	노 동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협력사업 관리		○	○	MOU체결 인센티브·정보제공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 산학연 사업 기획 및 관리 - 기술공유 및 확산				충남TP
		산학협력 사업 특성화 대학 및 학과 유치		-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 유도		○	●	MOU체결 인센티브·정보제공
	토 지	산업단지 재생		-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	
		계획입지 유도		-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전환 지원사업 - 관련 인프라 제공 및 제도 정비			○	
		전용단지 공급		- 지역 특수목적의 전용단지 조성	○	△	○	예상생단지(대·중소기업)
		SCM 정비 및 구축		- 공급사슬망(SCM) 기초연구/계획수립 - SCM 육성사업			●	
	기 타	교통 SOC 공급정책		- 국가도로 및 철도 공급계획		●		도·CDI 사업기획 및 예타 대응작업 필요
		기 반 시 설 정 비 공 급	관련법제도 정비	- 기초통계 정비 - 관련계획 수립				CDI 및 유관기관
			유형 기반시설 공급	- 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 - 기반시설 정비				
			관련 법 제도 정비	- 법제도 정비작업		○	○	도·CDI·전문가
	기타	통계정비 및 계획 수립		- 기초통계 정비 - 관련계획 수립		○	●	CDI 및 유관기관

* 포함된 정책과 사업의 내용들은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 보다 구체화 및 추가될 필요 있음(이 예시들은 향후 산업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사업예시는 계속 발굴 및 추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 외에도 앞서 설명된 경제 통계들이 GIS(공간정보시스템)와 연계됨으로써 필요한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유형과 규모, 그리고 그들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충남에 요구되는 사업(예를 들어, 기반시설)의 유형과 그 소요규모는 다른 지역들의 그

것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의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된 변수 및 그들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을 예시하면 다음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및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개별 사업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이용가능한 자원이나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자원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외에도 특히 이러한 사업내용의 구체화는 국책사업 발굴과 유치과정에 필수적인 사업타당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요구사업의 계획내용과 타당성분석 결과 사이의 피드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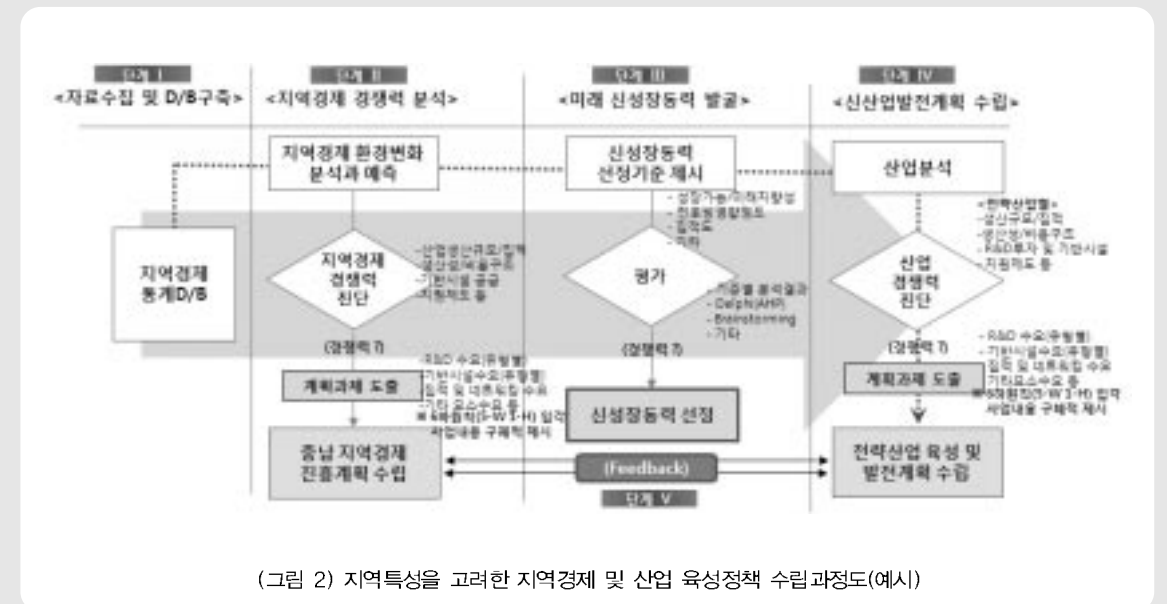
4.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제 및 산업정책, 기초작업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지금까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 및 산업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경제환경을 고려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이 설명되었다. 산업활동을 포괄하는 지역경제 내의 부문별로 각 주체별 행태나 그 성과로부터 타지역과 차별성이 나타나며, 문제의 인식과 대안의 제시과정에서 다른 지역경제와는 이질적인 충남 지역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어야 함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나 산업활동에서 지역의 특성은 직관에 의한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관련 이론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규명이 가능한 것임이 설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제 및 산업정책의 준비를 위해서는, 타지역들과는 차별적인 지역경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관련통계의 정비와 이를 통한 과학적 분석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때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정비는 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의 통일된 지침인 SNA(국민계정체계)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D/B를 이용한 분석은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구체적인 경쟁력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점과 정책 및 계획과제들은 구체적으로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정책 및 계획과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서 그 정도를 메꾸 나갈 수 있는 대안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대안들이 포함된 경제 및 산업정책이나 계획은 수립이 가능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 지역발전 도모하기 위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발전 전략 및 계획의 준비가 상시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고에서는 (그림 2)와 같은 경제 및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계획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계D/B와 이론체계에 기반한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 지역이 당면한 경제 및 산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하기 위한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충남발전연구원 차원에서 지금까지 단계 I과 II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선정 통한 전략산업육성 계획과 이와 연계된 지역경제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이 실시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이나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 또는 계획이 주로 다른 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앞으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기반구축 결과를 공유하여 충남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계획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CEC, IMF, OECD, UN and World Bank(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SNA 1993),

태안군 어촌체험마을 재방문의향에 관한 연구¹⁾

김종화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태안군 어촌체험마을 재방문의향에 관한 연구



I. 서론

최근 어업·수산업 등의 산업적 패러다임이 어촌·어항 등의 공간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어업인 소득을 올리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90개의 어촌체험마을에 약 95만명이 방문하여 228억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체험객은 27%, 체험소득은 28% 증가하여 도어교류, 어업인 소득향상 측면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또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을 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체험마을의 수가 증가하고, 규모화되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들어서면서 방문객의 눈높이와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져 어촌체험마을에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또 인근 어촌체험마을 내의 구성원간의 갈등과 인근 체험마을과의 경쟁구도 형성 등으로 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방문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손재영(2008)은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어촌체험마을에 적합한 어촌관광상품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어촌관광상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는 어업 및 생태체험활동, 레포츠활동, 음식, 가격 순이었으며, 속성수준에서 어업 및 생태체험활동은 어패류 및 해조류 채취, 레포츠활동은 육상레포츠, 음식은 자가 취사 및 매식, 가격은 20만원이 가장 효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배(2009)는 2006년까지 영남지역에서 조성된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결과 체험객은 주로 초등학교 자녀를 동반하는 3~10명 단위이고 인터넷을 통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정보를 수집하고 주간에만 방문하는 관광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태 외(2010)는 어촌체험이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잠재적 수요자가 약 200만명에 이르고 도시민의 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교통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동주(2011)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종단적 시간비교연구를 통하여 수요측면에서의 시간흐름에 따라 관광객의 방문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08년과 2010년에 공통적으로 어촌체험, 교육·문화, 휴식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영 외(2011)는 어촌체험, 환경의식지각과 체험만족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촌체험의 체험적 요소가 높고, 환경의식을 높게 지각하는 관광객일수록 체험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용일(2012)은 어촌체험에서 경험하는 신기성 특성이 만족도와 재방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탈성이 만족도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고, 재방문은 만족도와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측변수를 통하여 방문객의 속성, 방문요인, 만족요인 등을 도출하였다. 또 환경의식, 신기성 등 어촌체험마을이 갖고 있을 다양한 특성과 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방문객의 재방문의향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 재방문의향은 어촌체험 경험이 있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대변하고, 가까운 미래의 잠재적 고객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마케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일(2012)이 신기성과 만족도, 재방문의 인과관계를 파악했으나, 이는 신기성이라는 특성에 한정되었기에 그 외 요인(심미, 교육, 오락, 편의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방문객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이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가까운 미래의 잠재적이고 충성도가 높은 방문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II. 어촌체험마을의 현황

어촌관광이란 어촌·도서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어메니티(Amenity)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관광형태이며, 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이라고도 한다(이계열, 2010).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관광의 공간적 영역으로 어촌에서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도어교류를 촉진하고 이가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 경영체라고 할 수 있다(양길승 외, 2009).

1) 본 연구는 김종화·조은정(2014)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유형화에 관한 연구: 충남 태안군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의 데이터를 재이용하여 분석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해양수산부, 2014). 2013년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받은 어촌 수는 122개소이며, 이 중 운영이 미흡하고 유명무실하여 지정이 해제된 22개소를 제외하면 총 100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이 운영 중에 있다. 어촌체험마을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고, 경남, 충남·강원, 경기·경북순이다 [표 1].

〈표 1〉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년	122	3	5	0	10	11	1	11	7	35	10	20	9
해 제	-22	0	-2	0	-1	-4	-1	-3	0	-6	-3	0	-2
소 계	100	3	3	0	9	7	0	8	7	29	7	20	7

자료: 해양수산부 정보사전공개자료, 2014.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이나 기후, 교통 및 인프라, 정주·생활여건 등의 매개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법정리에 위치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의 병술만과 대야도 어촌계이다. 설문조사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대전리서치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총 277명의 응답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형태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고, 분석모델은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AMOS 18을 이용하였다.

2. 측정변수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재방문의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심미성, 체험성, 편의성, 지역성을 인과관계에 있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재방문의향은 한 개인이 과거에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재차 방문하려는 의향이다(김상원, 2012). 재방문의향은 방문 경험이 있는 고객이 미래에도 제공된 서비스를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Brady et al., 2001; 이승익

외, 2009 재인용), 미래에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하는 행동이다(Oliver, 1997; 최영진, 2014 재인용). 이용일(2012), 최영진(2014)을 참고하여 재방문 의사, 만족여부, 체험비용 상승에 따른 재방문 의사에 대하여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심미성은 어촌에서 방문객의 시·지각에 의해 발생하는 감성 주도적 평가반응이다(Hassenzahl, 2008 오의택 외, 2012 재인용). 김석영 외(2011), 김상현 외(2011), 이용일(2012)을 참고하여 새로운 체험, 모험심을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셋째, 체험성은 어촌체험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이다. 어촌체험마을은 어업체험과 전통놀이 등을 통한 지식습득과 오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김중천(2004), 박덕병 외(2005), 문성배(2009), 신동주(2011), 김보균 외(2011)을 참고하여 새로운 지식 습득, 체험프로그램 만족, 전통놀이 기능여부를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넷째, 편의성은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특정 시스템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만족의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Davis, 1989). 어촌체험마을에서 편의는 인적·물적 서비스, 접근성, 홍보 및 안내, 시설 및 부대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표현될 수 있다. 최현석 외(2007), 이계열(2010), 김상현 외(2011)를 통하여 시설위생, 음식가격 적정여부, 주변시설 정비, 주차시설 편리, 주민친절, 휴식공간 보유여부, 지역 향토식품 구매 가능여부를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지역성이란 특정 지역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자연환경, 관습·풍습, 분위기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지역만의 성질이다. 어촌체험마을은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 및 환경, 관습 등을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샘 외(2009), 김보균 외(2011)를 바탕으로 특산물 또는 기념품 다양성, 향토음식 다양성, 향토음식 맛, 유명축제 여부, 자연경관, 자연환경을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속성

본 연구의 응답자는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위치한 병술만과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이다. 총 응답자의 수는 277명이고, 이 중 병술만 105명, 대야도 172명이 응답하였다. 유효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고, 결혼여부는 기혼비율이 미혼보다 월등히 높다. 연령대는 만 31-50세가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직업은 회사원이 33.9%로 가장 높다. 학력은 대학이 45.8%로 가장 높고, 소득은 3천만원 초과에서 5천만원 이하의 비율이 67.1%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전북 20.2%, 경기 17.7%, 충남 15.9%로 서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았다(표 2).



〈표 2〉 응답자의 속성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나 이	만 18세 ~20세	17	6.1	성 별	남성	134	48.4
	만 21세 ~30세	42	15.2		여성	143	51.6
	만 31세 ~40세	74	26.7		미혼	57	20.6
	만 41세 ~50세	77	27.8		기혼	220	79.4
	만 51세 ~60세	46	16.6		병솔만	105	37.9
	만 61세 이상	21	7.6		대야도	172	62.1
직 업	공무원	37	13.4	거 주 지	서울	31	11.2
	회사원	94	33.9		경기	49	17.7
	자영업	55	19.9		대전	38	13.7
	전업주부	52	18.8		충북	41	14.8
	학 생	25	9.0		충남	44	15.9
	교 원	9	3.2		전북	56	20.2
소 득	기 타	5	1.8	학 력	기타(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18	6.5
	2천만원이하	6	2.2		고등학교	102	36.8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43	15.5		전문대	39	14.1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97	35.0		대학	127	45.8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9	32.1		대학원	9	3.2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35	12.6				
	6천만원 초과	7	2.5				

2.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델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계측하기 때문에 관측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규분포 형태를 따르지 못하는 측정변수를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총 22개의 변수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은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통하여 분석하며, 1단계는 잠재변수 단위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상관패스를 통한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2단계는 설계된 모형을 통해 계수를 측정하고 가설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다항목으로 구성된 현재 모델이 단일모델로서 수용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저해하는 측정변수를 제거하였다(송지준, 2009). 또,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장선에서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요인들을 결합하여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송지준, 2009). 이를 위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C.R.(Critical Ratio)값을 검토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4개 변수(음식가격 적당, 지역향토식품 구매 편리, 맛있는 향토음식, 유명축제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8개의 측정변수가 사용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성을 Cronbach's α 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여 각 요인의 α 계수가 0.6을 상회하거나 근사

치로 나타났다. 또한 각 측정변수의 구성개념 신뢰도(CR: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하였으며, CR은 일반적인 추천치인 0.7보다 높게 나타났고, AVE는 일반적인 추천치 0.5보다 높거나 근사치에 있어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계수, 2010).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CMIN/DF=2.003, RMR=0.030, GFI=0.898, AGFI=0.861, IFI=0.868, CFI=0.864, RMSEA=0.060로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신뢰도 검증

잠재변수	관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CR	AVE	α 계수
심미성	어촌체험마을을 통하여 놀라운 체험을 했음	3.99	0.70	0.807	0.597	0.626
	어촌체험마을을 통하여 새로운 체험을 했음	4.33	0.61			
	어촌체험마을을 통하여 모험심을 느꼈음	3.99	0.68			
체험성	어촌체험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음	4.09	0.63	0.793	0.563	0.604
	어촌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함	4.08	0.60			
	어촌체험으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었음	3.92	0.69			
편의성	체험시설이 위생적이고 깨끗함	4.00	0.72	0.806	0.456	0.674
	주변시설이 정비되어 있음	3.90	0.79			
	주차시설이 편리함	4.01	0.71			
	주민들이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음	4.30	0.64			
	휴식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음	3.76	0.67			
지역성	특산품 또는 기념품이 다양함	4.15	0.66	0.799	0.501	0.605
	향토음식이 다양함	4.03	0.62			
	자연경관이 뛰어나	4.31	0.63			
	자연환경이 좋음	4.34	0.61			
재방문의향	기회가 되면 다시 지금의 어촌체험마을 방문할 것임	4.33	0.56	0.813	0.597	0.581
	지금 어촌체험마을에 전반적으로 만족함	4.25	0.56			
	체험비용이 오르더라도 지금을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할 것임	3.92	0.62			

3. 분석결과

먼저, 본 연구모델에서의 외생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는 0.313~0.735로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0.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豊田, 2003). 또한 연구모델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대체로 수용가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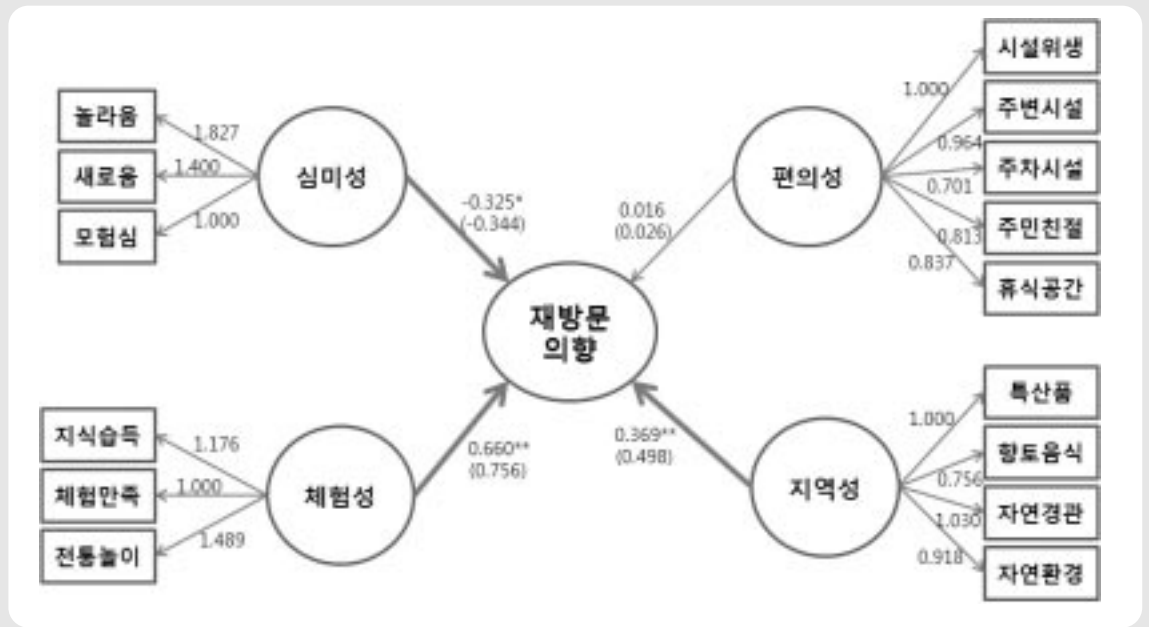
가설 1 '심미성은 재방문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다. 어촌체험마을을 통하여 느낀 놀라움, 새로움, 모험심이라는 심미적 요소는 재방문의향과 유의한 인과관계에 있으며, 이는 김석영 외(2011)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김석영 외(2011)와 다르게 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나 재방문에 의한 심미적 감정의 발생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2 '체험성은 재방문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다. 어촌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통놀이를 즐기며, 그것에 만족함에 따라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석영 외(2011), 김보균 외(2011)와 같은 결과로 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3 '편의성은 재방문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각되었다. 체험시설과 부대시설, 주민친절은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김보균 외(2011)이 농촌체험마을에서 편의성을 나타내는 기반시설이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과 대비된다. 그러나 어촌체험마을 경우, 지난 10여년간 정책적인 지원아래 구성되어 체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대체로 갖추어져 있고, 조성마을 선정에서 주민역량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어촌마을 차별성으로 대두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4 '지역성은 재방문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채택되었다. 특산물 및 향토음식, 자연경관과 환경이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보균 외(2011)와 동일한 결과로 지역의 향토성과 자연경관·환경이 어촌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재방문의향에 대한パス

〈표 4〉 연구모델 분석

Table with 5 columns: 가설 (Hypothesis), 비표준화계수 (Unstandardized Coefficient), 표준화계수 (Standardized Coefficient), t값 (t-value), and p값 (p-value). It lists hypotheses H1 through H4 and the model fit statistics.

이러한 분석결과를 구조화하기 위하여 패스(path)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측정변수로부터 재방문의향까지 미치는 경로의 강도를 보면, ① 「전통놀이 체험성 재방문의향」이 0.983, ② 「지식습득 체험성 재방문의향」이 0.777, ③ 「특산물 지역성 재방문의향」이 0.369, ④ 「자연환경 지역성 재방문의향」이 0.334로 나타나, 전통놀이, 지식습득, 특산물, 자연환경 등의 측정변수가 재방문의향에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장소마케팅 전략 제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미성, 체험성, 지역성이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놀이, 지식습득, 특산물, 자연환경 등이 재방문의향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소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자원이 표출하는 지역성으로 방문객을 어필(appeal)해야 한다. 지역의 특산물, 향토음식, 자연경관, 자연환경 등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역성을 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한 지역자원을 방문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지역의 경관, 환경 등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통해 지역 먹거리지도를 만들고, 이를 통한 지역 푸드투어리즘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문화와 지식이 결합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방문객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및 유물, 역사, 학문 등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 개발된 체험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의 개발·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방문객의 심미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모션의 전개가 필요하다.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경관, 시설 프로그램 등의 구비가 필요하다. 방문객의 심미적 감정을 적극 이용하여 놀라움과 새로움을 주고 모험심이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요소를 어촌체험마을 곳곳에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적 요소는 “감성마케팅”과 결합하여 방문객의 호감을 최대한 이끌어 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편의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지역적 요소가 가미된 체험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방문객의 편의성을 찾고자 체험마을을 방문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역의 자연과 경관, 특산품과 향토음식,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한 심미적 감정을 느끼고자 체험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마을의 편의성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하다.

Ⅶ. 결론

본 연구는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심미성, 체험성, 지역성이 재방문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 세부적으로는 방문객이 느끼는 즐거움, 새로움, 모험심이라는 심미적 감정과, 지식습득, 체험만족, 전통놀이를 통한 체험적 요소, 특산품, 향토음식, 자연경관 및 환경을 통한 지역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성을 표출하고, 전통문화와 지식을 결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방문객의 심미적 감정을 자극하는 프로모션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편의성은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시설 확충 등의 투자만으로 방문객을 유인할 수 없으며, 시설 확충보다는 콘텐츠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하여 편의성 확충을 위한 투자대신 지역성, 전통문화, 자연경관 등의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가까운 미래의 잠재적 고객의 요구(needs)를 파악하여 중요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태안군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타지역 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재방문의향을 측정하고 요인을 파악하여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 김보균·손호기·이명숙·박인환(2011),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선택속성에 대한 만족과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18권제3호, 한국농촌지도학회, pp531-550.
- 김봉태·이승우(2010), "어촌체험관광에 대한 도시민 수요 특성 분석", 『수산정책연구』, 제8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13-33.
- 김상원(2012), "신혼여행지 재방문 제약협상이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 1970~80년대 제주도 신혼여행 경험자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제8권 제4호, 동북아관광학회, pp149-167.
- 김상현·엄서호(2011), "농촌관광 체험활동이 서비스품질 만족과 농촌마을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25권 제3호, 한국관광연구학회, pp91-108.
- 김석영·김한주(2011), "어촌체험관광과 환경의식지각이 체험만족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제7권 제4호 (통권15호), 동북아관광학회, pp249-269.
- 김종천(2004) "거제지역의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배(2009), "어촌체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3권 제10호, 한국항해항만학회, pp771-776.
- 박덕병·이혜현(2005), "농촌관광 마을별 농촌관광 체험활동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상응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농촌관광학회, pp141-158.
- 신동주(2011), "어촌관광 방문동기와 만족도: 장호어촌체험마을의 2008-2010년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6권 제3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541-558.
- 손재영(2008),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어촌관광 선택속성에 관한연구: 동해안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제23권 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107-132.
- 송지준(2009),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
- 이계열(2010), "블루투어리즘을 통한 어촌활성화 방안 연구: 삼사면 초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도서학회, pp61-80.
- 이승익·최수근(2009),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 품질이 고객만족, 신뢰,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한국조리학회, pp16-29.
- 오의택·박민웅(2012), "스마트폰의 심미성이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제15권 제2호, 한국감성과학회, pp249-258.
- 이섬·신해식·모영문·신호중(2009), "녹색농촌마을 방문객 성향과 선호도 분석", 『농촌관광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농촌관광학회, pp76-102.
- 이용일(2012), "어촌체험 마을의 체험 신기성과 방문만족과의 관계", 『한국도서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도서학회, pp151-168.
- 양길승·문화정(2009),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흥군 수문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도서학회, pp89-108.
- 최영진(2014),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지각가치,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2호 (통권 39),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pp29-58.
- 최현석·박석희(2007),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부래미 농촌체험관광마을 사례", 『농촌관광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농촌관광학회, pp23-41.
- 해양수산부(2014), 2014년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정보사전공개자료.
- Oliver, R. L.(1997).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Columbus, OH: McGraw-Hill.
- Brady MK·Robertson DJ·Cronin JJ (2001), Managing behavioral intentions in diverse cultural environments, J international Management 7(2), pp129-149.
- Hassenzahl, M. (2008). Aesthetics in interactive produc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beauty. In: Schifferstein, H., Hekkert, P. (Ed), Product Experience. Elsevier, San Diego, CA, 287-302.
- Davis, Fred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Quarterly, 13(3), pp319-339.
- 豊田秀樹(2003), 『共分散構造分析(疑問編)』, 朝倉書店, 2003.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로서 계룡시의 효율적 행정서비스제공 방안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로서 계룡시의 효율적 행정서비스제공 방안



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통합성과 연속성은 일련의 통합된 체계 내에서 행정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접근성은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편리한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는 단순한 산출결과보다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효율성을 의미한다.

②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경향

과거 전통적인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강옥모, 2008: 149-151). 첫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요결정은 기능별로 분화된 담당 중앙부처의 상층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집행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셋째, 복지서비스는 민간이나 시장이 아닌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대체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이동형 외, 2007: 14).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양재진, 2009: 315-317).

첫째, 다수의 연구들에서 정책결정과 통제권한이 분권화를 통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민간 중에서도 비영리조직뿐만 아니라 영리조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가장 최근의 변화로는 개별 결정기구의 통합, 서비스조직의 협력관계 형성, 그리고 수혜자의 참여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앞선 논의가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라면 지방자원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민영화는 정부 전체의 경향이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순화로 특정 서비스분야의 전달기구가 다수 존재할 경우 책임의 명확화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의 기구로 전환시키는 개편작업이다. 셋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간적 통합화로 다수 서비스분야의 전달기구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모의 논의

계룡시는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2003년 9월 19일 논산시에서 각각 분리하면서 탄생했다. 규모 면에서 계룡시는 면적이 60.74km²로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작으며 행정구역도 3면 1동으로 전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그 달성방법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가 다르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이 자치단체가 지닌 특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치단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과정 없이 일률적인 규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향후 더욱 큰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 분명하다. 계룡시 역시도 2003년 지방자치단체로 새로이 출발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 중 하나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정책적 방향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행정서비스 전달체계¹⁾

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요소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요소들은 행정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적절성은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적

1) 금청호 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8-9 재인용



국에서 가장 단출하다. 우리나라 시·군·자치구의 구역이 얼마나 광역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선진국의 기초정부구역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시·군·자치구의 수와 평균 인구·면적을 주요 선진국 기초정부의 수와 평균 인구·면적과 비교한 것이다. 국토면적이 좁아 조밀하게 사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평균면적은 영국 다음으로 넓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면적은 광활한 국토를 갖는 미국 기초지방정부의 평균면적보다도 1.8배나 넓다.

<표 1>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기초지방정부 규모

국 가 명	기초정부 수	기초정부당 평균인구	기초정부당 평균면적(km ²)
프 랑 스	36,763	1,743	15
스 위 스	2,681	2,835	15
스 페 인	8,109	4,998	62
독 일	14,805	5,452	24
미 국	39,006	6,623	240
이탈리아	8,104	7,040	37
핀 란 드	416	12,620	713
스 웨 덴	290	31,240	1,417
덴 마 크	98	56,127	433
일 본	1,772	67,313	210
영 국	433	128,061	560
한 국	228	219,298	428

출처: 각국 CIA의 The World Factbook 자료로 계산해 작성한 것임

물론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대규모 행정구역 자치단체의 경우 무엇보다 행정기구의 운영 등에 있어 행정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즉, 이는 자치단체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서비스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과 연계된다. 또 다른 이점은 정주생활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정주체계와 행정구역의 일치, 즉,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과 일치시켜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입지기피시설의 설치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규모 행정구역은 NIMBY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외부효과 문제를 소규모 행정구역의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계룡시처럼 비교적 작은 행정구역의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대응하기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대규모화에 따른 문제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이 작은 지역은 대규모 행정구역 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 정치적 대표성은 지역주민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참여범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3자들의 이해관계까지도 내재화(internalize)시킬 수 있는 정치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계룡시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규모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이며 단기간에 그 규모가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룡시가 효율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자치단체가 지닐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로서 계룡시의 운영방향

1) 자치단체의 정체성 확보

계룡시가 자치단체로서 10년의 기간이 지났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자치단체로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계룡시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체성의 논의에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계룡시가 왜 분리되어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한다면 오히려 정책방향 설정은 간단할 수 있다. 자치단체 출범 초기의 비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두 개의 정책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정운영의 틀을 전체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물리적서비스에서 프로그램서비스로 전환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어 왔고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사업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단지 등 대규모 물리적 시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패러다임과 주민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시설과 서비스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에 대한 일환일 것이며 행복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은 물리적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룡시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경제지향적 발전전략에 입각한 논리를 대입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룡시의 경우는 경제논리 보다는 복지와 환경, 문화 등 경제논리 이외의 또 다른 논리가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적극적 주민참여방안 강구

계룡시처럼 행정구역과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모두에게 그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렇다면 계룡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목적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한다면 계룡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대규모 자치단체들과는 다른 주민참여제도를 강구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운영의 모범사례로 정립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인근지역과의 광역행정수행체계 구축

대규모 행정구역 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기반시설과 물리적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설 모두가 그 사용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룡시의 경우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기도 어렵지만 갖추다 하여도 그 비효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룡시의 경우는 인근지역과 이러한 사회기반시설과 물리적시설을 상호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리적 공간이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의 경우도 상호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들의 요구와 이를 수행할 공공기관의 역량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 이외에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대민과의 직접행정 실현

우리가 말하는 대민행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정부 업무 가운데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업무를 말한다. 중앙정부보다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는 대민행정에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인·허가 업무, 도로표지판 설치,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행정 업무가 포함된다. 이러한 대민행정서

비스는 사실 행정구역의 규모와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 대민서비스는 분명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논의된 많은 사항들을 대변할 수 있다. 즉, 주민참여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시행하는 것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성공적인 것은 없다. 계룡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보다 분명 장점이 있는 만큼 공무원과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의 장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영역과 제공방법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5. 마치며

계룡시 역시도 행정패러다임에 부응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및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아 일부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계룡시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자치단체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규모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립적 지방자치단체의 모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이다.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은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여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제도와 행정서비스제공을 통해 자립적 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강정운, 도시통합의 개념과 가치, 『통합창원시와 로컬거버넌스』,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0
- 곽채기, 지방잠재력강화의 핵심과제, 『자치행정』, 6, 2010
- 금창호 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경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방향, 『시도뉴스레터』, 28
- 안성호,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지방분권연구와 워크숍 자료, 2012
- 유재원 외, 시군통합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행정학보』44(1)
-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의 방향과 과제, [제도와 경제], 3(1)
- 최봉기, 경험을 통해 본 한국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 [자치행정], 267, 2010
- 최영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한 실증적 연구, 『지방행정연구』19(2), 계룡시 내부자료.
- Aligica, P. D. & P. J. Boettke, (2009), Challenging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The Bloomington School, New York: Routledge.
- Anderson, K. P. & E. Ostrom, (2008), Analyzing Decentralized Resource Regimes from a Polycentric Perspective, Policy Science, 41: 71-93.
- Ostrom, E. (윤홍근 역), (1999), [집합행동과 자치제도], 서울: 자유기업센터.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416-424.



골목따라 벽화따라! 천안 미나릿길 벽화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우리나라 벽화마을 어디까지 가봤을까? 통영 동피랑마을이나 수원 행궁동 벽화마을 등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라 인터넷에서 한번만 검색해보면 사진들과 관련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벽화마을이 충남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셨는지?

골목마다 이어진 추억의 시간여행! 최근 상영된 영화 '인터스텔라'의 워홀은 바로 '골목'이었다... 라는 감직한(?) 주장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곳! 바로 천안의 미나릿길 벽화마을이다.

미나리? 그렇다. 시원한 국물맛을 내는데 제격인 바로 그 미나리다. 이곳 천안 영성동 17, 18통 지역은 원래 실개천이 흐르고, 주변에 미나리가 많이 자라났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실개천이 복개되면서 미나리를 비롯한 옛 모습이 사라지고 이 골목만 남게 되었다.

이 골목은 천안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인근 중앙시장이나 천일시장 등과 함께 중심상권이었지만 점차 낙후되어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년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옛 추억을 간직한 문화를 입혀보자는 주민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소규모 지역 공동체 방식으로 새롭게 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어둡고 낡은 골목은 웃음과 따뜻한 정이 오고가는 벽화길로 조성되었다.



〈동그라미 부분이 미나릿길 벽화마을이고 원성천 사이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음〉



〈마을입구에 붙은 안내도〉

이 벽화마을은 찾기가 그리 수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뒷길에 낫말이 있긴 하지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이 조금씩 유명해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다보니 주민자치센터에는 '벽화마을 가는 길'을 묻는 민원(?)이 생겨났을 정도라고 한다.

먼저 벽화마을에 들어서면(미나릿길 11-2) 안내도가 보인다. 골목이 미로처럼

찾기 어렵지는 않지만 필자처럼 사진을 찍어놓고 골목을 걸으면서 한 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듯하다. 참고로 이곳엔 유난히 소위 말하는 '점집'이 많다. OO보살집 간판이 많이 보인다 싶으면 잘 찾아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벽화마을은 0.8km 구간의 골목 106개 벽면에 220점의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가족이나 연인끼리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사진으로 추억을 담기 좋은 다양한 벽화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과거 이곳 마을 주변의 풍경을 담은 그림부터 옛 선조들의 풍속화,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특히나 벽화에 트릭아트를 접목시킨 입체그림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다.



〈트릭아트 체험〉

이처럼 이 마을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 충전과 도시 재생이라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 원도심 재생이라는 커다란 고민거리를 해결시켜 줄 하나의 시범사업이기도 한 미나릿길 벽화마을! 천안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골목 변경전(좌), 변경 후(우) 모습



자료 :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제공

위 변화된 사진들을 보면 정말 골목이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자는 이 마을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마침 이 골목을 지나던 중 이곳에서 20년간 여인숙을 운영해온 웃음이 아주 매력적인 사장님과 스피드 일문일답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Q. 골목이 어때요?

A. 종지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는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당기니까~

Q.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세요?

A. 그럼요~ 다들 좋아해유~ 자식들도 손자손녀 데리고 놀러오른 재밌어하니까 사람 사는 거 같잖아유~

Q. 여인숙은 전보다 잘 되세요?

A. 음... 그건 좀 아닌디~ 요새 누가 여인숙을 찾나유~ 돈벌이는 비슷해유!

Q. 벽화는 계속 그대로 두나요? 아니면...

A. 매년마다 그림을 그리드만~ 학생들 와서 그림 더 이쁘지더라구~ 여기 사람들도 자치센터 직원들이랑 가끔 골목도 청소하고 하~ 깨끗해야 좋잖아유~

그렇다! 이 벽화마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물론 마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상권이나 천안 지역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또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그리고 골목에서 파는 미나리 파전 등 먹거리 개발 등 과제들이 엄청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곳 벽화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여기를 거쳐 목천 독립기념관이나 병천 순대타운 등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했다.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근처 태조산 자락에 자리잡은 각원사(覺願寺)를 둘러본다는 것이다. 이 각원사에는 좌대 지름이 10m, 좌대와 불상 전체높이는 15m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남북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제작된 아미타청동대좌불상이 있다.

물론 그것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다. 다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걸음걸이에 맞춰, 다만 한 발짝 정도만 앞서가면 된다고 말하고 싶다. 억지로 껴맞춘 이야기 말고 그들의 삶이 제대로 녹아있는 그런 골목이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웃들에게, 자연의 작은 생명체들에게 친구이고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창립 준비가 갖는 의미

조성미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준비운영위원장

예산과 홍성은 참 아늑하고 순한 땅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도 잊혀져 가고 있지만 서울에서 '장항선'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천안과 온양의 도심을 빠져나온 기차는 가쁜 숨을 고르기라도 하듯 속도를 늦추고 한적한 평야로 접어들습니다. 예당평야지요, 멀찍이 낮은 구릉들이 에둘러 감싸고 있는 들판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기차는 느릿느릿 달려갑니다. 합덕-예산-삽교-홍성에 이르는 아늑한 이 들녘은 언제보아도 평화롭습니다. 이 맘 때쯤이면 들녘은 온통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야트막한 산자락엔 빨강게 감이 익어가는 수수한 농가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지요. 흔들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땅거미 지는 예당평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로소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안도감에 온몸이 나른하게 풀리곤 했습니다.

저는 홍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해바다 짙 바람이 사철 불어오는 산골마을에는 제가 중학생이 돼서야 하루 두 번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오지였지요. 지금은 마을 뒷산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옆 동네엔 농공단지가 들어서 작은 공장들도 생겼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동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일년 내내 맑은 샘물이 펄펄 솟아나던 우물이 슬며시 말라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우물에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배추쌈을 씻어 먹었습니다. 여름엔 차고 겨울엔 따뜻했던 그 물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심할 때면 어머니를 따라서, 운동화를 잃어버리고 꾸중 들을 일이 걱정일 때도 저는 그 우물가를 서성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 우물은 어머니와 같아서 저

를 키운 8할은 그 웅숭깊은 우물이 아니었나 싶어 그립습니다.

예산과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유민의 땅으로 바다와 들이 모두 비옥하고 안온하기 그지없어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고자했던 옛 선비들이 은둔하기 딱 좋던 변방이었지요. 한 번도 중심이었던 적이 없는 이 궁벽한 들녘에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것 자체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입니다. 대대로 이곳에서 농토를 갈아 먹고 살던 원주민들은 이 갑작스런 개발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불안도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용봉산 아래 홍북 삽교 들은 비옥하여 농민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금싸라기 같은 농토였기 때문입니다. 쌀은 물론이고 딸기와 사과, 무, 배추, 버섯, 축산물까지 식량창고나 다름없던 생산의 땅에 아파트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밤에도 잠들지 않는 소비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저 시대의 변화이거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의식 저 편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립니다.

다행인 것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서 환경과 생태를 우선적 가치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하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믿고 있었던 주민들이 깜짝 놀란 것은 내포신도시에 난방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만들면서 당초 공표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발전소의 연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 시공사의 주도 하에 슬그머니 바뀌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도시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연말 즈음이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창립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렵입니다. 환경파괴와 오염의 문제가 대도시, 소비자의 문제만이 아닌 농촌의 생산자들에게도 삶을 위협할 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다 전문적인 환경운동단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여러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발기인대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5일 예산의 윤봉길기념관에서 1백 50여 명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예산과 홍성의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모처럼 예산과 홍성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게 된 것입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아직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을 모으고, 충남도와 시공사에 발전소 건설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의사가 반영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건강과 친환경 자원순환의 원칙 등 처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쓰레기매립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활쓰레기 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자들에 의해 농촌으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광된 석면광산에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청양 강정리마을이 그렇고, 예산의 대술면 궤곡리마을 주민들이 3년째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궤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건립 반대 현장〉

예산의 궤곡리는 논과 숲과 마을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입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사이좋게 지내던 궤곡리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 사업자의 이간질로 민심까지 갈라지는 등 평화롭던 마을이 유례없는 풍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 야산에 조성하려고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3만여 평 부지에 매립용량이 132만㎥에 달하고, 지하를 깊이 파고 에어돔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합니다. 예산군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사업자에게 '사업계획부적합' 통보를 내렸는데 사업자가 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예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궤곡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탄원서를 내고, 현장답사와 궤곡리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갖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삼교 상하리 레미콘공장설립 반대, 예산 고덕 녹수화학 공장 환경오염 문제, 예산 광시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황새 서식지 교란 문제 등 예산환경운동연합은 정식 창립 전인데도 여기저기에서 긴급한 SOS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우리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로 놀랍니다. 그만큼 지역이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경관련 현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 자신은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힘에 맞설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자연의 작은 생명체들에게 그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전부지요.

짧은 기간이지만 환경운동연합 활동은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

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광산의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며 어렵게 싸우고 계시는 강정리의 어르신들과 송전탑에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을 빼앗긴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든 후 금강의 녹조현상과 죽어가는 물고기들, 날마다 자동차에 치여 도로 위에서 죽어가는 길짐승들, 서식지를 빼앗기고 떠나가는 황새들,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이름과 얼굴은 모르고 살아왔지만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깃발아래 모인 예산홍성의 환경지기들은 보이지는 않게 서로의 존재를 떠받치며 기대어 살아온 한 식구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깨달음은 웬지 모르게 눈물겹습니다.

우리는 발기인선언문에서 '작은 도토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거대한 떡갈나무의 혁명을 이루어 내듯이, 예산 홍성의 작은 도토리들이 모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땅을 지켜 내고 물을 지켜 내고, 하늘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작은 사람들이고자 합니다. 밀양과 강정리와 궤곡리의 어르신들이거나, 수만년 이어져온 물길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리는 강물과, 도로건설로 쫓겨나는 작은 생물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이들의 벗이자 바로 그 작고 연약한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모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저 정기적으로 모이고, 함께 밥을 나눌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는 것 뿐이지만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 옛날 이 땅의 농민들이 '얕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들여다보고 그리하여 그들이 끝끝내 하늘이 되고 땅이 되었듯이(김준태의 시 〈농민〉의 일부) 우리도 그렇게 땅이 되고, 물이 되고, 하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연대의 힘입니다. 함께 하면 아름답고,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 예산환경운동연합(준)은 2015년 초 창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산형 도시재생사업 : 산복도로 르네상스 감천문화마을

권진휘 | 부산발전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원팀

최근 들어, 독특한 경관과 색채가 있는 공간적 가치에 예술작품을 더하여 문화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감천문화마을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 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으로 더욱 활기를 띠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원도심의 보존과 종합적 재생을 통해 낙후된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마을로 변모시키는 부산 도시재생의 모델인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과 그 추진과정에서 마을경제활성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나아가 앞으로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감천문화마을 소개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0.62km²(구의 1.5%)행정구역 면적으로 4,363세대 9,677명(구 전체2.7%)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1,934명(거주민구의 20%)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있어 고령화된 지역이기도 하다. 주택은 총 4,571가구 중 단독이 3,889가구, 공동주택이 68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10여동(전체 5%)의 빈집이 있는 원도심 쇠퇴지역이다.

감천문화마을은 과거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던 태극도 신도들이 6.25 전쟁으로 부산 보수동 등에서 파란생활을 하던 중 화재로 인해 1955년 감천동 지역으로 집단 이주해와 생성된 지역이다. 감천문화마을은 초기

천마산과 옥녀봉 사이 해발 200m~300m 지점의 비탈면에 판자집 1천여 가구를 지어 거주하면서 '태극도 마을'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였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앞집은 뒷집의 일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이로인해 현재 계단식 형태를 가질 수 있어 한국의 '마추픽추'¹⁾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좁은 대지로 인해 집집마다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해 공동화장실을 만들기도 하였다.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파스텔톤의 색채와 모든 길이 통하는 골목길,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한국의 '산토리니'²⁾로 불리며, 전국의 사진작가와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57년 감천문화마을 모습〉



〈현재 감천문화마을 모습〉

〈그림 1〉 감천문화마을의 과거와 현재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일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2009년)",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2010년)", "어르신들과 작가들의 손길로(201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2011년~2012년)", "생활환경 개선사업(2011년)", "친환경 가로등 교체(2012년)",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기업 오픈(2012년)", "마을미술프로젝트(2012년)", "전통 우리신「화해」교육 및 전수관 조성(2012년)" 등의 크고작은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중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공간재생, 생활재생, 문화재생, 경제재생 등의 종합재생을 원칙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추진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1차적으로 2011년 시비 8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 커뮤니티센터와 마을기업 마을카페가 조성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골목길 정비, 조명시설 설치, 작은 박물관 조성, 작은 미술관 조성, 천덕수 우물복원, 마을주민일터 조성, 맛집조성, 포토존 조성, 담장가꾸기, 미로미로 꽃길 조성, 홈페이지 제작, 커뮤니티 광장 조성, 마을신문제작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및 공동이용시설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페루 남부 쿠스코시(市)의 북서쪽 우루밤바 계곡에 있는 잉카 유적으로 해수면으로부터 2,430m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계단식 밭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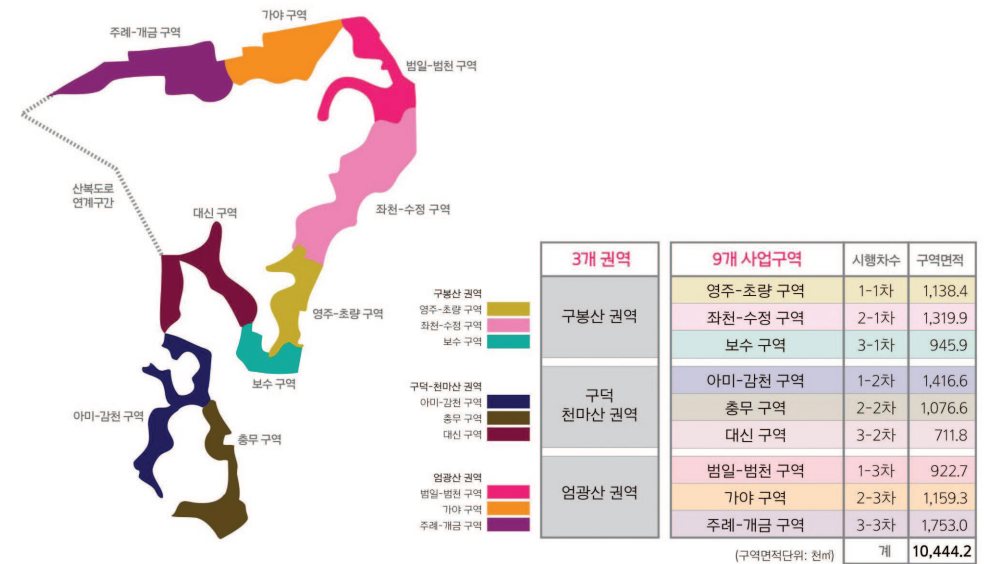
2) 에게 해에 있는 그리스 키클라데스 제도 최남단의 섬으로 300m 절벽 가장자리에 백색의 건물들이 뒹어져 있어 섬 전체가 예술적인 풍경을 품고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여겨진다.

〈표 1〉 감천문화마을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년 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2011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808	건물 562.23㎡ (지하 1, 지상 4층) 갤러리, 이트샵, 강좌실 등 조성
	마을기업 커피숍 조성	73	건물 47.8㎡ (지상 1층) 기존 노후주택 리모델링
2012년	공영주차장 설치	998	주차면 49면
	서구 경계간 도로개설	987	L=35m, B=6m
	골목길 정비	100	위험옹벽 정비 등 L=500m
	생활환경개선 사업	300	공중화장실 신축, 도로포장 등
	조명시설 설치	91	가로등 등기구 46개 교체(LED)
	작은 박물관 조성	160	건물 리모델링 1개소
	작은 미술관 만들기	470	건물 리모델링 4개소
	천덕수 우물복원	124	우물복원 1개소
	마을주민 일터조성	180	공동작업장 1개소 신축
	맛집 조성	141	신축 1개소
	포토존 조성	254	3개소
	담장가꾸기	138	타일벽화 등 옹벽 2개소
	미로미로 꽃길 조성	60	L=600m 꽃길 조성(꽃화분 설치)
	홈페이지 제작	50	문화마을 소개 등
	마을만들기 사업	400	커뮤니티 광장 조성 등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란?

감천문화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마을을 되살려 보고자 2009년 예술가와 주민·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응모하면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는 부산시의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부산형 도시재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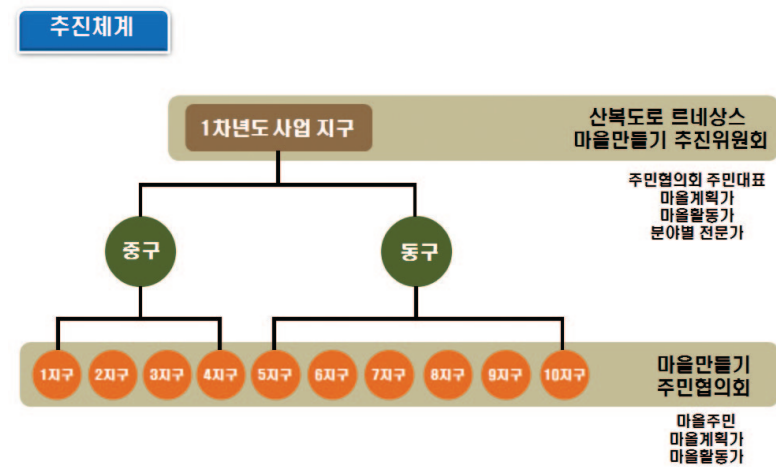
〈그림 2〉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구역도

부산의 산복도로³⁾는 일제시대 식민지 노동자들의 거주지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귀환동포의 정착지였다. 이후 6.25전쟁 피난민의 대규모 정착지였고, 경제개발기에는 서민층의 무허가 정착지가 되어 부산의 역사가 녹아든 곳이다. 산복도로 일대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불량하고 공공·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지역이며 타지역에 비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산복도로는 현재 난개발과 압축성장으로 인해 부산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역사자산지역이다. 이러한 산복도로는 그 가치를 복원할 때, 부산만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명소로 재조명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산복도로는 기존 물리적 개발위주의 사업은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거주민이 재정착이 어렵고 지역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물리적 개발방식이 아닌 종합적 지역재생을 통해 마을원형을 보존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부산은 산복도로라는 장소적 희소성을 살리고 서민주거 환경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행정구역과 지형, 그리고 생활공동체 등을 고려하여, 녹지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크게 3개 권역, 9개 사업구역으로 구분되며, 사업기간은 10개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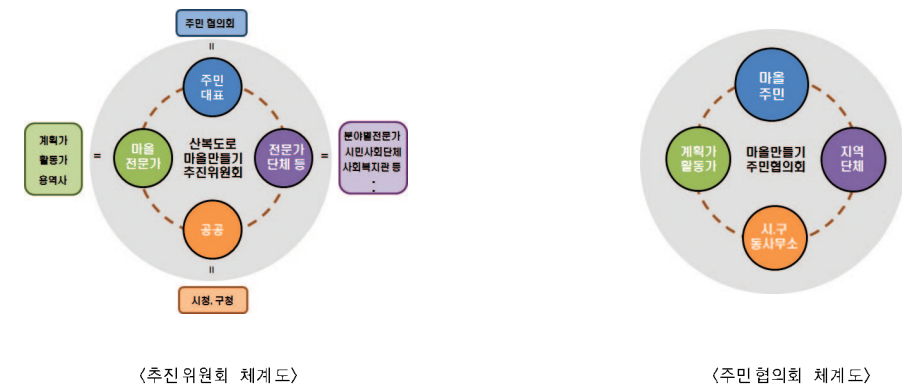
3) 산복도로란 산(山)의 종턱(腹)을 지나는 도로를 뜻한다.

(2011~2020년)으로 권역별 상생적 순차 개발방법을 적용한다. 사업비는 매년 150억 원 정도로 10년간 1,500억 원이다. 부산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 1차년도 사업을 사례로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마을계획가, 마을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이고, 둘째, 마을주민, 마을계획가, 마을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 이다.



〈그림 3〉 사업 추진체계 : 산복 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지구 예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검토 및 자문과 주민협의회 활동지원, 그리고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의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조율기능을 담당한다. 이 추진위원회는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주체별로는 주민협의회 대표가 10명, 마을계획가 10명, 마을활동가 10명, 행정담당자(공공기관) 4명, 전문가 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주민협의회는 각 지구별(10개 지구)로 1개씩 구성되며, 협의회 구성원은 인원제한 없이 공개로 모집된다. 주로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 및 기업, 학교, 종교단체, 복지단체,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며, 인원이 많을 경우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주민협의회는 마을계획가 및 활동가 등의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협의회 대표는 주민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사업추진과정 속에서 마을주민, 행정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를 총괄하고 리드해 갈 수 있는 마을계획가 및 활동가를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다. 일반적으로 마을계획가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위주로 선발하고, 활동가는 주민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경험자,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복지사, 예술가 등을 선발 기준으로 정한다.



〈그림 4〉 사업 추진체계: 추진 위원회와 주민 협의회

한편, 마을계획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구역 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총괄 조정 및 관리이다. 즉, 담당 마을별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프로젝트의 구상 및 계획, 그리고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를 이끌어 가는 역할이다. 둘째, 시청·구청·주민센터 등의 행정과 중간지원조직과의 마을만들기 정보교류 및 협의이다. 계획가는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진내용, 마을현황, 주민협의회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항상 교류 하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셋째,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활동가의 활동방향 제시 등의 활동조율자의 역할이다. 마을활동가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추진 시 마을활동가, 마을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 중간지원조직 등과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마을계획가는 인접한 사업대상지의 각 주체들과 연계하여 마을간 연대 등의 협력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첫째, 주민·마을계획가·행정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및 계획가의 협력매개자 역할을 한다. 즉, 공공·주민·계획가 사이에서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매개자 역할과 주민의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결집 과정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계획가와 협력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마을활동가의 현장활동은 마을계획가가 사업추진을 위해 제시한 활동방향을 따라 수행한다. 둘째, 주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홍보, 마을만들기 관련 기록관리, 마을현장 상담수행 등이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마을경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추진은 주민공동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마을경제 활성화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형성단계를 같이 한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주민공동체 형성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주민공동체 구성 및 운영단계이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마을주민교육, 마을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주민역량강화를 도모하고, 마을정기회의, 워크숍 등의 마을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는 주민공동체 법인전환 단계이다. 마을수익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주민공동체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비즈니스, 실무교육, 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사회적 기업 공모 등의 마을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연계하여 마을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셋째는 주민공동체 법인운영 단계이다. 마을수익사업을 통해 마을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국비 및 시비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자립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은 주민공동체 형성과정과 마을경제 활성화와 단계를 같이하며, 이를 위해 지원센터의 교육지원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마을만들기 교육과 관련하여 초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마을만들기 이해 및 홍보, 마을리더발굴 및 마을계획수립 워크숍 등의 기본교육을 진행한다. 다음 마을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설립,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운영 등의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한다. 추후 설립 전후로는 마을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교육(요리교실, 바리스타교실, 공예교실 등과 회계·세무 등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실제 마을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리더의 존재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 각 교육과정에서 마을리더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과 인증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예로, 감천문화마을의 주민협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리더는 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감천문화마을의 활동경험을 다른 마을에 전수할 수 있도록 마을강사, 마을활동가 강사 등의 마을전문가로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종료 후에서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표 2〉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주민공동체 형성단계 및 기능

구 분	단계별 주민공동체(마을경제) 형성과정 및 기능
1단계	▷ 주민공동체 구성·운영 - 주민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주민공감대 유도, 마을기초조사·마을실행계획 참여·의견제시
2단계	▷ 주민공동체 법인 전환 - 마을수익사업 계획 수립·추진, 마을자립 프로그램 운영 - 주민협의회의 법인 전환(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 마을기업·(예비)사회적기업 등 공모, 거점시설 유지·관리 방안 수립
3단계	▷ 주민공동체 법인 운영 - 마을수익사업, 마을거점시설 운영·관리 - 국·시비 등 마을만들기 관련 공모사업 추진 - 지속가능 마을자립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자력수복형 마을종합재생 등

감천문화마을의 경우도 마을수익사업 추진에 있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현재 마을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현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의 마을수익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인 감내맛집과 마을생산품을 판매하는 감천문화마을 미니숍, 마을기업인 감내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수익사업은 주민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기 마을수익사업 운영 시,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많이 참여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주민협의회의 참여와 역량이 강화되고, 점차 주민협의회 주도로 운영이 되었다. 최근에는 구청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내어울터(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등도 주민협의회에서 스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정도로 주민협의회는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는 홍보와 마을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무엇보다도 주민·행정·마을전문가·중간지원조직의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 어느 한 주체의 역할소홀도 공동체 활성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 감천문화마을의 성공은 이러한 각 주체의 역할 간 호흡이 잘 맞아 이루어 졌다.

한편, 감천문화마을이 전국적인 명소도 거듭나면서 유명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의 민간자본이 여러차례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관계 담당자들과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그 진입이 차단되었다. 현재 이러한 민간자본들의 진입은 주민협의회에 가입과 동의에 따라 허가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다. 주민협의회에 가입된 이해관계자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마을에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는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수익환원과 관련된 원칙은 주민들 스스로의 회의 및 의견수렴으로 이루어졌다. 감천문화마을은 마을지도, 감내카페, 감내맛집 등의 마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마을집수리 사업단,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답사(교육)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림 5〉 사업 추진(마을 경제활성화)와 마을 교육체계

정책제언 :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발전전략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은 본격적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계획된 201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5년 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해 이바구길 등 조금은 부산형 도시재생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은 아직까지 지역적 편차가 있는 주민참여 부족, 주민중심 마을거점시설 운영부재, 성과위주 사업방식, 지속적 연계사업 부재 등의 많은 풀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부산의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관주도형 마을만들기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행정주도성향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주민역량수준이 높고 사업추진 능력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부산의 마을만들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민참여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물론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 경험에 있는 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정도가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 마을사업을 과거방식처럼 행정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 활동가 교육, 워크숍, 설명회 등에서 참여정도가 2년, 3년 사이에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다르다. 그리고 참여자들 계층 또한 매우 다양해 졌다. 과거 필자가 주민교육 또는 마을활동가 교육을 홍보하고 참여유도를 할 때는 대부분이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참여자도 대부분 40~50대의 주민들, 주로 동원된 통반장 분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 연령대는 20대 대학생에서부터 30~40대 주부, 60대 정년퇴직자 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이 마을만들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감천문화마을도 초기에 마을관광화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마을사업 실질 혜택자 문제 등의 많은 논쟁거리를 낳았다. 하지만 그간 크고 작은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마을공동체는 조금씩 진화하였다.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며 공동체 활성화는 알게 모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유명 마을만들기 사례지로 존재하며, 부산 뿐 만 아니라 전국에서 마을만들기 성공사례지로 알려지며, 부산의 마을만들기 사업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제 부산은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유명마을을 추가로 발굴하여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주민참여 등의 저변확대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명마을의 존재는 그 자체로 홍보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리더의 발굴과 마을활동가 양성이 유기적으로 전개되면 타 지역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그 파급효과는 긍정적이다.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은 그 동안 공을 들인 만큼 문제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다행히 현재 민선 6기에도 도시재생사업은 주요 시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적용, 정부공모사업 활용, 사업기간 단축 등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이다. 둘째, 문화, 예술, 역사, 경관, 스토리텔링 등 산복도로 자산 브랜드화 및 테마가 있는 마을조성으로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다. 셋째, 민·관·학이 협력하여 마을만들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마을자립을 지원(컨설팅)하며, 주민, 지역사회, 행정간 파트너십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모니터링 시행해야 한다. 넷째,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에 대비해 정책지원 대책 수립과 산복도로 도시민박 활성화로 주민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고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평가 참가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세계에 홍보하고 부산형 도시재생모델의 전파를 통해 사업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부산발전연구원, 2011, 2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2, 감천문화마을 조성현황
부산광역시, 2014, 5. 산복도로르네상스 4년 성과 및 발전계획

충남인터뷰 - 충남도의회

도민의 행복만 생각하며 의정 펼쳐나가겠다!



백 낙 구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약력 :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보령시 부시장, 부여군청 부군수, 충남도의회 의사당당장 역임, 제18대 대통령선거(새)대책본부장, 제8대 충남도회의의원, (현)제10대 충남도회의의원

▲ 정치 입문 배경은?

전에 의사당당장, 수석전문위원 등 서기관까지 공무원생활을 해왔다. 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잔뼈가 굵았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펼쳐보고자 들어서게 됐다. 처음엔 몰랐지만 꽤 매력있는 일이다. 물론 정치적 신념과 공익의 가치를 제대로 잡고 간다면 말이다.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도정의 기획·재정 및 예산, 조직과 인사·감사·교육·홍보 등 도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의정활동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얼마 전 보령시민 중의 한분이 토지 경지정리 관련 불법 건축문제로 1년에 3천만원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선례가 없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한거다. 결국 내 귀에까지 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까지 가서 살펴보니 애초부터 공무원이 제대로 안내를 못해준 원인도 있었고 연세 많은 노인어른이 잘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도 있었다. 비록 생면부지의 시민이었지만 결국 보령시와 협의를 거쳐 잘 되는 방향으로 고쳐나갔던 적이 있다.

공무원은 도·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이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시민과 거리를 두면 그 시민은 죽으라는 거냐? 도·시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닌가!

▲ 보령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우선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예를 들면 먹거리·볼거리·놀거리를 해수욕장에 만들어 줘야 한다. 물론 보령머드축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는 하나 이 하나만으로는 이 끌어갈 수 없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즐길거리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 요즘 같은 충남이지만 태안이나 안면도의 유명세가 무서울 정도다. 접근성이 좋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 원산도나 안면도로 가서 쉬려고 하지 대천까지 오려고 안 할까. 앞으로 연륙교가 개설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보령의 항만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을 만들어 놓아야 물동량이 생기는데 물동량이 있어야 항을

만들 수 있다는 시선의 차이다. 우선 시급한 건 홍보지구가 막혀있다는 거다. 밀물과 썰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퇴적층만 쌓여 준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거다. 보령신항 개발의 필요성은 점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리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항이 아니라면 다목적항으로 계획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의 고속화도 필요한데, 결국 이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령의 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해서 살아있는 연구성과를 만드는데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의원들은 해당 시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시군과의 밀접한 협력을 충남연에 요구하고 싶다. 물론 해당 시군의 단체장의 역량이나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협력이 잘 되기도 하고 갈등 양상을 띠기도 하지만 결국은 도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 끝으로 향후 계획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임기가 2년인데 이제 4개월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우리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선배로써 집행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시켜주고 싶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책임의식을 갖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시군 행정감사를 없앴다. 23년만이다. 도의원들의 전문성이 공무원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결국 견제와 감시라는 명분도 좋지만 효율성을 중시하자는 취지가 높다. 그렇다고 시군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행정감사 준비할 시간에 도민을 위한 행정 하나라도 더 펼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한편, 4년 동안 보령출신 도의원으로서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그리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아산시민이 위임한 브레이크 페달! 충남도민 위해 쓰겠다

약력 : 순천향대 졸업, 선문대 사회복
지학과 석사 졸업, 온양문화원
사무국장, 자유선진당 충남도
당 대변인, 성웅이순신출제위
원회 사무총괄위원, 충남학교
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역
임, 제9대 충남도의회의원(문
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재
10대 충남도의회의원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기 승 |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정치 입문 배경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당 사무처 조직부장, 사무국장, 국회보좌관 등으로 약 25년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

지난 2010년도에 충남도의회원으로 출마했고 올해 재선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뽑아주신 아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초선에는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교육위원회에 와서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 지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직이나 인력 등이 문제가 많았다. 결국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도록 유도해 충남청소년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토록 한 것이 일단 기억에 남는다.

사실 알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누구나 그 성장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야만 어른이 되는 거 같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



서 컸다. 이게 핵가족화되고 자식들 과잉보호 때문인지.. 아이들에게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닌가 싶다.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소통하고 자신감있게 커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어른들이 좀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할 때다.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라는 게 참 어렵다. 어느 한쪽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흐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예결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충남도 예산 중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40%가 안 된다. 복지정책 확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한다는 국민의식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빚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지속성도 없고 나눠주기 식이 아니냐는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다. 특히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수립과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안전 부문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학교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안전진단을 비롯한 실천계획에 따라 철저히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 심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방안은?

먼저 아산시는 2016년 전국체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전국체전은 행사 그 이상의 지역사회발전



의 한 축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는 걸 보면 좀 아쉽다. 예산확보가 급선무인데, 지난 추경에 30억 원을 도비로 마련했고 2015년 예산에도 약 200억 원을 더 준비해야만 하는데, 잘 될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아산시로 바뀐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온양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아산시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산 소방서 신축문제가 남아 있다. 지금의 아산 소방서는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건축비가 없다. 약 8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16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쉬울 따름이다.

▲ 아산지역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총생산, 기업소득 등은 전국 최고수준이지만, 소득의 역외유출, 대중소기업의 상생관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결론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에 있다. 일례로 현대가 아산에 온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차선 도로로 출퇴근은 물론 운송차량이 지나다니고 있다.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또한 아산은 젊은 층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프라가 반겨주질 않아서 인근 천안 등지로 옮겨간다. 아산지역에 양질의 학교 건립이 시급한 이유다. 최근 삼성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일부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초중고가 부족한 상태다.

교육과 교통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제는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물적, 인적 자원들의 교류가 아닌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정주 체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의 협력은 물론 정책을 위한 연구성과라면 제대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동차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다. 우리 도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브레이크 페달을 잘 밟아달라는 위임권을 받은 것이다. 집행부의 가속 페달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쓴소리를 하라고 태어난 사람들에 '왜 브레이크를 거느냐'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잘 만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 써 달라.

대답 :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충남도민을 위한 정치, 아니 대변인의 소임 다 하겠다.

약력 : 광운대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청가든 식품 대표,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 제3, 5, 6, 8대 천안시의회 의원 역임, (현)제 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김 동 욱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정치 입문 배경은?

나이 40대 초반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님들이 한번 시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없느냐는 권유로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정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한 마디로 시민의 대변인?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이것이 제가 풀어나가야 할 소임이라 생각한다.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천안시청 이전단계에서 나뉘대로 도서 지역 간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시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있겠는가. 지난 시의원 3선을 통해 천안시 발전에 일조했다면 이제는 충남도민을 위한 봉사로 키워가고 싶다.

▲ 행정자치위 부위원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의에 자원했다. 초선이기도 하지만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싶은 욕심에서 결정했다.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도민들에게 쓰일 예산의 효율성을 짚어보고 집행부의 도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천안시의 지역현안이 있다면?

천안은 아시다시피 급속한 발전으로 곧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가 커지는 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사실 농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타지인들의 유입도 많다 보니 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로망이라던지 교육문화예술분야 등은 아직도 취약하다고 본다.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신경써야 할 때다. 특히 구도시와 신도시를 갈라놓고 있는 철도문제가 크다. 지역내에서조차 격차가 심해지는 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회 젊은 층의 활력이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이 하나되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 중심에 젊은 학생이나 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도해내야 할 것이다. 삭막한 회색빛 천안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본다. 성장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고, 그와 어울려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

▲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향은?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특색이다. 지리적인 여건, 서해안 시대, 도민의 착한 심성 말이다. 이런 부분을 살려서 타 시·도와 다른 특색있는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전문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연구가 잘 되어도 이를 집행할 공무원의 마인드가 부족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함께 할 것이다.

▲ 고교평준화에 대한 생각은?

사실 천안은 평준화가 되어 있다가 95년에 비평준화가 되었다. 평준화시절에 천안의 교육은 너무 침체되어 있었다. 지역에서 나뉘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외지로 학교를 보내는거다. 그러다 보니 천안의 교육은 더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비평준화로 다시 돌아온 지 이제 20년이 되어간다. 평준화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천안시 교육의 안정화와 신뢰가 다져지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므로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취지다. 평준화를 한다 해도 학생 간 교육수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더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연구원에서 보내주는 충남리포트 잘보고 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

다만, 정책으로의 활용과 연결이 중요하다. 연구원이 노력해서 만든 연구성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도나 시·군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김형철 초빙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충남의 백년지대계, 청소년 교육만큼은 내가 챙긴다!

약력 : 미국 로올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강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민주당 아산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 역임 (현)라인갤러리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및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윤 지 상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정치 입문 배경은?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결혼 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 아내와 함께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민주당에 있던 지인들이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특히 평소 많은 고민을 하던 교육과 문화발전 분야에 기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천할 수 있겠다 싶어서 뛰어들게 되었다.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아직 초선이라서 많은 일을 수행하진 못했지만 최근 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갈등관리 전담부서인 갈등관리팀을 만들게 한 것이 있다. 행자위 위원들이 공동으로 힘을 실어준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역할이 있다면?

지방행정이라는 말이 참 어려우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행정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다녔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힘이 되고 있다. 도정의 중요한 부분인 예산, 정책, 인사 등의 큰 그림을 조정하는 곳이 바로 행자위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아산이 달라졌으면 하는 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도시경쟁력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세종시나 내포신도시 공무원이 자녀교육 때문에 선뜻 이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나. 아산은 인구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은 구축되어 있지만, 교육·문화·복지 등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만들어낸 공약이 바로 영어도서관 설립, 아파트나 지역내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라 생각한다. 지역 자체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일정부분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산시 기업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바로 로컬푸드다. 아산에 위치한 삼성이나 현대에 가보면 한 끼에 15000명 이상이 식사를 한다. 물론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지역의

많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이다.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 전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실천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길 바란다. 물론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좀 더 도서관 지원사업이나 인적 교류,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 직접 토론회도 개최하셨는데?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안전하게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열었던 토론회에서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도 모셔서 아산시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착 우리 청소년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한 게 어른들이다.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의견을 듣고, 아산시나 충남도에서도 좋은 의견은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행사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산시에 제안도 할 것이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책이라는 게 사실 실효성과 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지역만의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잘 키워주신 도의원, 충남도민 위해 보답하겠습니다!!

약력 : 천안중앙고,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국회 입법정책 보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회원, 충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및 충남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제9대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10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등



유 병 국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정치 입문 배경은?

1998년도에 양승조 의원님을 법률사무소에서 만나 같이 일을 했는데, 양승조 의원님이 2004년도에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 나는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지역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당선되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소망이 컸다.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내가 당선되자마자 발의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조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천안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꽃밭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꽃도 기르고 화분도 만들어서 팔고 있었지만, 잘 만들어도 안 팔리고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편견 때문인지 판매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계기로 이번 조례가 생기고 난 후 실제로 매출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났다고 하더라. 이 조례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 경우였다. 소위 '잘 만든 조례 하나, 온 국민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 우리 도내에 장애인이 20만 명이 있는데 어찌보면 20만 명이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더구나 이 당시 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해서 더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계속 일을?



그렇다! 계속 할 것이다. 제가 9대 때도 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조례와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조례도 발의했다. 그런데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많이 아쉽다.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제도는 보증금을 도나 시가 매칭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대상자들은 관리비와 저금리 이자만 내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도시지역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며 반대하더라. 그런데 최근 천안시에서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이번 천안시장 공약이 영세민주택 2000호 공급인데, 그 중에 200호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이처럼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면 훨씬 수월하게 추진될 텐데... 아쉬울 따름이다. 희망카페도 잘되고 있다. 천안의 한 기업이 사내에 희망카페를 오픈했던 게 시발점이었다. 현재는 도청이나 관공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으로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의원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얼마 전에 캐나다, 미국에 견학을 다녀왔다. 그 지역 부시장님이 지역 대학교수시더라. 부시장은 봉사직이고 월급은 대학에서 받고, 소위 지역 도의원들도 다 따로 직업이 있었다. 초등학교교장, 의용소방관 등 아주 다양했다. 그들의 보좌관은 하루종일 민원 처리와 서류검토를, 도의원은 정책제안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우린 도의원이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일례로 감사기간에는 여러 기관들의 감사자료가 한 박스씩 오는데, 언제 이걸 보고 언제 질문서 쓰고 하느냐? 한계는 분명히 있다.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은 이걸로도 확실하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게 될 보좌관제도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천안시 지역 현안은?

천안은 경부선철도를 기준으로 원도심 지역인 동부권과 신흥주택지인 서부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두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등 교통문제도 심각하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천안의 교육열이 너무 높아 사교육비도 많이 든다. 이번에 고교평준화를 하게 되면 일부 해결되는 문제인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아쉽다.

▲ 특히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교통부문은 도로와 철도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로부문에 있어서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건설의 단·장기적 계획 및 추진 전략이 필요하고,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연계교통망 체계 정비에 있어서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철도부문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시 구간 지하화, 청주역 신설 천안역사의 정식화(현재 가설 역사임)가 필요하고,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로와 철도의 타당성 분석에 반드시 이용되는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인 국가교통DB(이하 KTDB)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천안시 인구가 현재 60만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2.9%)하고 있는 추세이나 KTDB에서 현실과 다르게 반영되어 장래 통행량이 과소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KTDB가 수정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잘하고 있다. 다만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술연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의성있는 정책연구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도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들도 필요하다. 마침 2015년이 20주년이라고 하니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연구원이 되길 바란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김원철 선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신념과 열정으로 도민에게 봉사하겠다!

약력 : 천안공업고등학교,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료, 해병대 전우회 아산지회 제7대 회장, 제8대-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 역임, (현)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의장,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이 기 철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정치 입문 배경은?

지금도 잊지 않는 1991년 3월 2일! 온양온천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등교지도를 시작한 날이다. 2005년도까지 계속 하게 될 줄은 몰랐다(웃음). 그러던 중에 주변에서 그런 열정과 신념으로 정치를 한다면 더 큰 봉사가 될 것이라는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변함없는 열정과 흔들림 없는 모습을 시민들이 좋게 봐주셨던 모양이다.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첫 번째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됐던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아산이 빠져 있었던 것을 포함시킨거다. 그러나 아산지역은 예로부터 우마차와 조운선 등으로 한양으로 양곡을 실어 나르던 중간 기착지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지역이었다. 아산을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권에서 뺀다면 내포 몸통을 빼고 팔다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1890년에 당시 공세리 지역은 프랑스 신부가 내륙지역 처음으로 부임해 선교활동을 시작한 공세리성당이 있다. 최근 교황 방문 등으로 더 관심이 높아져서 지금도 성지순례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0년도에 안 지사에게 건의해 포함시키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아산에

있는 둔포고등학교 이야기다. 저기 변두리에 위치한 이 둔포고는 인문계고등학교였지만 폐교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다가 고민하던 중에 우리 아산에는 삼성, 현대 등 첨단기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취업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고용할당제'를 해 달라는 주문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의견을 종합해 지난 5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게 되었고 바로 둔포전자기계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된 것이다. 지역의 현실에 부합한 교육을 통해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즉 아산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행자위는 도민생활의 전반을 아우르고 챙길 수 있는 위원회라 생각한다. 도 기획관리실이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의 행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맞물려 열심히 노력하겠다.

▲ 아산지역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는?

아산의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5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30만대만 생산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최소한 50만대 이상을 생



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타 지역에서는 자동차공장 유치를 위해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보라. 부지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또 한 가지는 현충사에 있다.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대단한 호재가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놓쳐버렸다고 봐야 한다. 현충사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없다는 거다. 더구나 현충사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의 크기도 실물크기와는 다르다. 즉 임진왜란 테마파크가 아산시에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현충사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다. 실물크기의 거북선에도 타고보고 갑옷도 입어보고 투구도 써보고 칼도 휘둘러보고 활도 쏘아보고 말도 타고보고 말이다. 또 군사들이 먹던 주먹밥 등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열어 임진왜란 체험도 하게끔 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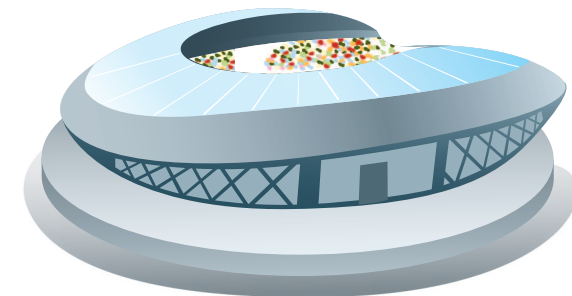
▲ 2016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201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려면 적어도 지금의 교통상황으로는 어렵다. 천안-아산 간 국도 21호가 천안쪽에선 8차선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외곽도로와 갈라지는 구간에서는 아산 방향으로 편도 2차선이다. 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배방에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2016년 전국체전에 충청남도 계획에 의하면 북한 선수단을 초청한다고는 하고, 국민적 관심은 폭발할 것이 예상되면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현재 계획으로는 혼잡한 교통상황을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전국체전을 치룰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칭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 마디를 건넨다면.. 충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물론 뜬구름 잡는 연구 말고 현실성 있는 미래전략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노력해줬으면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도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머슴역할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약력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신성대학 행정실무과 졸업, 부성테크오션사장, 충남발전협회의 회 부회장, (현)대전지방 당진 법원 민사조정위원,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이 용 호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정치 입문 배경은?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믿음직한 정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모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어주는 정치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풍토 조성은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저는 지역의 새롭고 참신한 일꾼, 그리고 정치권의 실천의지와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정치 소견이다. 한국의 정치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송곳 끝부터 바로잡는데 앞장서고자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초년생이다.(웃음) 도의회 의정활동 5개월인 풋내기로서 기억에 남을 뚜렷한 활동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며, 후회 없이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 인터뷰에는 이 부분을 가장 길게 말할 수 있게 하겠다.

▲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의원은 풍부한 행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을 알아야 행정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꼼꼼히 챙겨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선의원이지만, 39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동료의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역동적인 충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반 행정 방향과 틀을 점검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믿음을 살 수 있는 머슴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당진시의 가장 큰 현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개발과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때 문인지 행정, 교육, 치안, 문화,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조화로운 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에 많은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결과에 불복하고 2010년 평택시가 요청한 당진-평택항 간 매립지 관할 분쟁,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 그리고 삼교호 수질개선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중점적인 활동은?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시민과 행정 이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당진-평택항간 매립지 관할 분쟁을 예로 들자면,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도·시·도민들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 충남도는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충남과 경기도간의 해상도계 분쟁인 만큼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개설 사업은 충남도의 항만발전은 물론 매립지 관할 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선점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당진시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삼교호의 맑은 물 되살리기 사업은 당진시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유역 기초단체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호수로 되살릴 수 있도록 충남도가 주축이 되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당진시는 사실 농업기반이기도 한데?

그렇다. 농촌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현재 당진시는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이며, 농업은 당진시의 기간산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농업·농촌·농민은 지역에서 외면 받는 천덕꾸러기가 절대 아니다.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는 가운데 농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천혜의 해안 항만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지역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행정을 통하여 충남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당진으로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명칭 그대로 우리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밖에 없는 종합연구기관이다. 우수한 인력과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어려움 없이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 환경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나친 간섭이나 행정 낭비로 연구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는 거다.

아울러 충남도의 정책협력체계의 강화,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남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본 연구원을 활용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말 그대로 열린 연구원의 지향점은 칭찬하고 싶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이수철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충남도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생활정치의 모범이 되겠다.

약력 : 공주대 행정학과 졸업,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졸업 공주시의 회3대 5대의원, 제9대 충남도 의회의원, 예결위원장, (현)제 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조길행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정치 입문 배경은?

시의회에서 8년간의 의정생활과 30여년의 새마을 운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미래의 공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충남도와 공주시의 가교 역할을 통한 생활정치를 직접 실천하고 싶었다.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재선 의원이다. 시의회까지 합하면 13년째 의정활동을 한다. 지난 9대 후반기에 예결위원장을 역임했고, 10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후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현상과 농촌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어떻게든 세종시와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농촌 문제의 대안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굳이 하나하나 언급할 일은 아니다.(하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은 많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된 일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하나 둘씩 들어주고, 새로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을 때가 가장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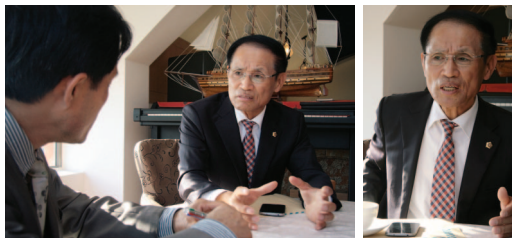
▲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은?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40명 의원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특히 상임위 간 의견조율 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행정자치위원으로 생활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데 노력하겠다.

▲ 공주시의 가장 큰 현안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KTX 호남선 공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크다. 논산시와의 접경지역이자 30km 이내에 청양과 부여 등이 인접해 있어 남부 내륙지역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또한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공주시 인구감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에 사는 분들의 절망과 불신을 녹여내야 한다. 농촌을 살려야 한다. 지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점적인 활동은?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별 농촌 특화사업 발전, 유통체계개선, 6차산업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구와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동반성장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마인드는 긍정적이다.

▲ 공주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공주시는 2015년도에 외부적으로는 세종시 인근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과 정부의 내부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점과 기회로,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문제와 복지정책 확대와 내수 위축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약점과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내부적으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도시재생 추진 등 지역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과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관광경쟁력 강화를 기회와 강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상존과 복지정책 및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증대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들이 상존되고 있다. 공주시는 이런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 미래비전의 공유, 재정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행복 프로그램 발굴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교육도시로서의 품격을 한층 높여가야 할 것이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도의 정책개발과 도민의 생활정치가 결합된 현장 밀착형 연구가 중요하다. 또한 각 시·군 정책대안(이슈)의 구심점 역할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실장/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계룡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실천활동의 모범이 되겠다

약력 : 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계룡시 체육회 이사, 계룡군 문화발전재단 이사, 제8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9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



조 치 연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정치 입문 배경은?

계룡시가 2003년 9월에 출범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 주변 사람들이 출마해보면 어떨까... 하며 권유를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개인적으로 건설업에 몸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던 시민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계룡시에는 소방서가 없다. 119센터만 있다. 2006년 당시 10층 이상 아파트가 136동, 5층 이상이 68동이였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충남도에 고가사다리차가 총 5개밖에 없을 때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예산을 수립해 구입한 것이 기억난다.

나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토목기술자이기도 하다.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SOC사업들을 보면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는 사업들이 있더라. 또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계기사, 방화관리 등 총 6개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 이 계룡의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특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좋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관련 민원들을 해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



▲ 행자위 위원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은?

처음 4년간은 건설·소방을, 다음 4년은 문화·복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무엇보다 예산 심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선별해내는 것인데, 의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니까.

지금 한창 예산 심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게 많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제대로 된 곳에 제 때 쓰여지길 바라는 맘이다.

▲ 계룡시에 가장 큰 현안은?

현재 계룡시 인구가 4만 3천 명 정도다. 아시다시피 계룡시는 군인과 그 가족이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신관면의 경우는 아예 민간인이 없다.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유치가 좀 더 활발히 되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바로 소방서 문제다. 사실 소방서 하나 들어오기 쉽지 않다. 지난 2011년도에 119센터를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계룡시는 소방서를 유치하면 되니 119센터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소방서를 운영하려면 그 부지를 도와 시가 제공해줘야 한다. 건축비, 부지매입, 소방장비, 소방인력 등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건물비만 해도 150억 이상이 든다. 심지어 의용소방대 수당도 도에서 준다. 예산 사정 등을 봤을 때 그 당시 119센터를 엄사면에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얼마 전 119센터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말이다. 생각의 발상이 참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보여진다.

그걸 아시는가?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청양군과 계룡시에만 소방서가 없다. 이번에 청양은 소방서 부지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근데 계룡시는 부지도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향



적산을 종교단체가 매입한다는 설이 있었다. 이곳은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특정 종교 단체에 매각을 함으로써 등산로 출입을 막아도 되겠느냐고 따진 적이 있다. 이걸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어서 매입하고 여기에 계룡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을 지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향적산은 도나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 일괄 매입을 못한다고 한다면 분할 매입이라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길 바라고, 그 가운데 나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 충남발전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말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림을 하느라 고생하는 걸 안다. 대체로 충남발전은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고 최근 계룡시와 공동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각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양이자 유산이기 때문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닌 지난 것들을 잘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바로 현재의 사명이 아닐까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지역활성화와 자원활용으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구마모토현 방문기

송두범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준섭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홍은일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I. 시작하는 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정책제안·교육·연구조사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2014년 센터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연구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국제교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방향을 단발적인 교류가 아닌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 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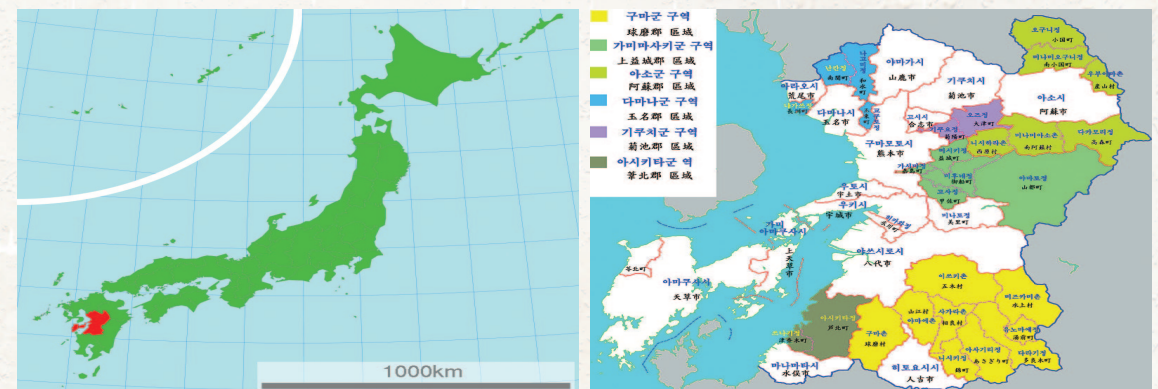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県)의 경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마모토현의 경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동시에 충남도의 자매도시로 지속적인 교류의 플랫폼의 구축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구마모토현과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교류일정은 2014년 11월 4일~7일, 3박 4일간으로, 구마모토현(상공정책과, 지역진흥과, 남녀참가협 동추진과) 및 구마모토 소셜비즈니스 네트워크, CHIKAKEN, 아소그린스톡, 큐슈바이오매스포럼을 방문 하였다. 이번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인상깊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CHIKAKEN과 큐슈바이오매스포럼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II. 구마모토현에 대하여

구마모토현(熊本県)은 일본 큐슈 중앙부에 있는 현으로, 현청 소재지는 구마모토시(熊本市)이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631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7,405km²(충청남도는 8,204km²), 현의 60%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북부는 비교적 높지 않은 산지이지만, 동에서부터 남쪽으로 표고 1,000미터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계곡들이 형성되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를 자랑하는 아소산(阿蘇山)의 경관은 뛰어나다. 현의 서쪽으로 아리아케해(有明海), 야쓰시로해(八代海), 동중국해를 접한다.

기후는 대체로 온난하지만, 내륙성 기후로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다. 평균기온은 16~17도 정도, 여름은 35도가 넘는 때도 있다. 겨울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인구는 2005년 현재 185만명이다.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7%로 일본 전국 평균 20.1%보다 높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1] 구마모토현의 위치와 시세

출처: <http://ja.wikipedia.org/wiki/熊本県>

구마모토현의 경제구조(2009년)는 1차 산업의 비율이 2.7%로 일본전국평균의 1.1%의 2.5배 수준. 반면 2차 산업은 19.2%(평균 22.8%)로 낮은 수준이다. 3차 산업은 78.1%(평균 76.1%)로 높다. 현내 총생산액은 5조6049억엔, 현 소득은 3조9587억엔, 1인당 현민 소득은 2,183천엔으로 전국평균의 2,791천엔의 80%수준이다.

특히 농수산업은 일본전국의 탑 클래스를 자랑하는데, 수박, 토마토, 메론, 감귤, 쌀 등은 주요한 농산물이며, 수산물 역시 참돔, 복, 새우 등의 출하량이 높고, 축산업과 임업도 중요한 부분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일본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반도체 등의 하이테크산업과 운송용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여, 반도체 및 운송용 기계 관련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최근에는 태양전지관련 산업진흥에 힘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구마모토현은 일본 공해의 원점이라고 불리는, 수은중독으로 인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水俣病)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나마타병이란 칫소(チッソ 窒素)주식회사라는 비료회사가 메틸수은화학물이 섞인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발생한 수은중독이다. 이것은 미나마타지역 그리고 구마모토현에 오랜 상처를 남겼다. 최근까지 계속되어온 공해병인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뿐만 아니라 미나마타=공해지역이라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Ⅲ. 사회적경제조직 방문

1. 치카켄(CHIKAKEN)

CHIKAKEN은 대나무를 이용한 조명제품 제작·판매하고 이를 활용한 축제기획을 하는 회사이다. CHIKAKEN의 시작은 부분별한 대나무조립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지역사회가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대표인 미시로(三城)와 이케다(池田)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나무를 이용한 조명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CHIKAKEN의 진정한 시작은 소조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우치마루(内丸)연구실(대표들의 출신 대학원)의 경험에서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치마루교수는 19년 전 시작된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宵)라는 오이타현 우스키시(大分県臼杵市)의 대나무등불축제의 기획자이며, 지금도 이 축제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 축제를 기획했던 경험들이 현재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잠시 축제에 대해 소개해보자. 우스키시는 오이타현의 작은 소도시로, 일본의 지방도시가 겪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도시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중심상권에는 셔터가 내려진 가게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스키시는 우치마루교수에 의뢰하였고, 우치마루교수 그룹은 대나무등롱(竹ぼんぼり) 오브제를 활용한 축제를 기획한다.

19년 전 초창기에는 1500개정도의 대나무를 활용한 오브제 1개로 시작한 작은 규모였으나, 현재는

2만개 이상의 대나무가 사용되고 오브제 역시 30개 이상으로 도시 전체가 들쭉이는 규모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연구에 따르면, 제4회 축제 개최 시점에서 4억엔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음)는 물론, 상점가 재생(16년간 150개정도의 새로운 가게가 생겨났음), 역사적으로 분단되어왔던 지역커뮤니티 재생, 고령자와 청년세대간 교류 활성화, 신규 관광객 증가 등 결과들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은 규수의 다른 지역도 자극하였고, 다양한 등불축제들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상세한 소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한다).



[사진 1] 우스키타케요이축제의 오브제

출처: www.visit-uita.jp



[사진 2]우치마루교수의 발표 장면(현정)

CHIKAKEN은 현재 6명의 직원(대표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들은 구마모토현 출신이다. 직원 중에서는 대도시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직장을 얻은 케이스도 있다. 일은 고되다. 봉급 수준은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CHIKAKEN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역의 환경피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규모이지만 앞으로 CHIKAKEN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 3] CHIKAKEN의 사업을 설명하는, 열정 가득한 나카무라(中村)공장장



[사진 4] CHIKAKEN 공장



[사진 5] CHIKAKEN제품

CHIKAKEN의 활동은 환경문제를 제품으로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있다. 그 시발점은 역시 대나무 조명이다. 축제 등에 사용된 대나무조명은 화학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만 안 되어 썩기 시작한다. 그래서 축제 등에 사용된 대나무조명은 곧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여진 대나무조명은 버려지지 않고 대나무 숲 및 대나무 비료로 재활용된다. 대나무 숲의 경우, 디자인된 숲으로 인기가 높고, 대나무 비료 역시 친환경비료로 인기가 높다. 이 사업은 CHIKAKEN이 직접 하지 않고 마을기업들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는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령자와 청년간의 세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2] 대나무의 활용

출처: CHIKAKEN 홈페이지(<http://chikaken.com>)

2. 큐슈바이오매스포럼(九州バイオマスフォーラム)

큐슈바이오매스포럼(이하 포럼)은 큐슈의 바이오매스 이용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NPO법인)으로, ①사업성 연구조사, ②바이오매스 이용을 위한 홍보·보급, ③네트워크 구축, ④바이오매스에 관한 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포럼의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아소시는 아직 화산활동중인 아소산 그리고 아소산으로 만들어진 칼데라지형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이 칼데라에는 드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있어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목축업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원의 풀 보존과 이용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임업이 발달해 왔고, 인공림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해외의 값싼 원목수입과 목재수요의 감소로 인해 임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임업의 쇠퇴는 비단 임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산림관리가 되지 않으면 산사태 및 홍수로 이어져 재해의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큐슈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범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자연자원은 활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직결된다는 것이 포럼의 나카보 마코토(中坊 博) 사무국장의 생각이다.



[사진 6] 전형적인 칼데라지형을 보여주는 아소시 전경

나카보씨는 포럼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다. 그는 원래 화산을 연구한 연구자였다. 화산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해가 닥쳤을 때 거대한 발전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상시적으로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에너지원이 되지 않으면 재해시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소산의 거대한 초원과 산림에 착목하고,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현재 포럼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요한 관심은 '장작판매'에 있다. 포럼은 장작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장작사용은 거의 없는데(0.9m³/백만명·년) 반해, 유럽은 적게는 30배(스페인 37m³/백만명·년), 많게는 1,000배이상(1015m³/백만명·년) 장작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작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는 듯, 포럼의 장작판매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 첫째 장작판매는 15만엔 정도에 그쳤지만, 2년째 150만엔, 3년째 380만엔으로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700만엔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 7] 아소산 중턱에 위치한 포럼의 장작 건조 시설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펠릿생산자와 스토브판매자, 개인이 납부하는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고, 지자체 및 NPO단체는 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펠릿 생산자 및 스토브판매자는 협의회 활동이 자신들의 사업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역시 장작 또는 펠릿할인권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낸다는 것이다. 즉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다.

협회의 활동은 일반인들에게 장작의 좋은 점을 알리는 한편, 장작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장작만들기 워크숍 또는 장작아트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일반인들에게 장작이 자주 노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정거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나무정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리포트 135호 참고).

[그림 3] '장작 아트 콘테스트'와 '장작만들기 워크숍'의 포스터(출처 : <http://qmaki.com/>)

IV. 맺음말

구마모토현의 사회적경제조직 탐방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긴 호흡'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사회적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긴 호흡(단기간에 성과기대 금물)'을 해야 하며,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사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던 말들이다. 그런데 이번 탐방을 통해 '긴 호흡'과 '네트워크 구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우스키다케요이 축제는 첫해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5년째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우치무라 교수는 말한다. 특히 수백년간 대립해왔던 커뮤니티가 축제를 통해 화해하기 시작한 것은 '긴 호흡'의 결과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긴 호흡'의 결과는 사회적경제조직 CHIKAKEN이 우스키다케요이(うすき竹箒)라는 축제를 경험한 2세대가 만들어낸 회사라는 점에 있다. 긴 호흡은 하나의 성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며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또한 '큐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는 네트워크구축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깨뜨렸다. 큐슈바이오매스포럼은 장작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스토브판매자와 손을 잡았다. 사실 스토브판매자는 시장경제영역이다. 스토브판매자 중에는 1억엔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곳도 있다. 포럼이 700만엔 수입을 올리고 있을 때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죽 썰어서 개를 주는 꼴'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포럼의 '나카보'씨는 단호하다. 유럽 등의 제품들은 몇 십년간 효율을 높여왔기 때문에(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리), 이용한다고, 그의 단 하나의 목표는 장작시장의 확대에 있다. 장작시장이 확대가 되면 포럼의 사업의 확대됨은 물론 안전한 사회, 재해에 강한 사회, 거대에너지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확실한 목적하에 진행되는 '네트워크 구축'은 논란거리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참고문헌

구마모토현 지역만들기 꿈챌린지추진사업 사례집(地域づくり夢チャレンジ推進事業事例集), 구마모토현 새로운 공공지원사업 성과보고(新しい公共支援事業成果報告)
 큐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 장작스토브·펠릿스토브를 활용한 삼림자원의 유효활용(薪スト&ーブ・ペレットを活用した森林資源の有効活用)
 위키피디아 자료 (<http://ja.wikipedia.org/wiki/熊本県>)
 CHIKAKEN 홈페이지(<http://chikaken.com>)
 큐슈장작·목질펠릿활용협의회 홈페이지(<http://qmaki.com/>)
 오이타현 공식관광정보 사이트 (www.visit-ota.jp)

유럽의 농촌마을에서 무엇을 배울인가

조영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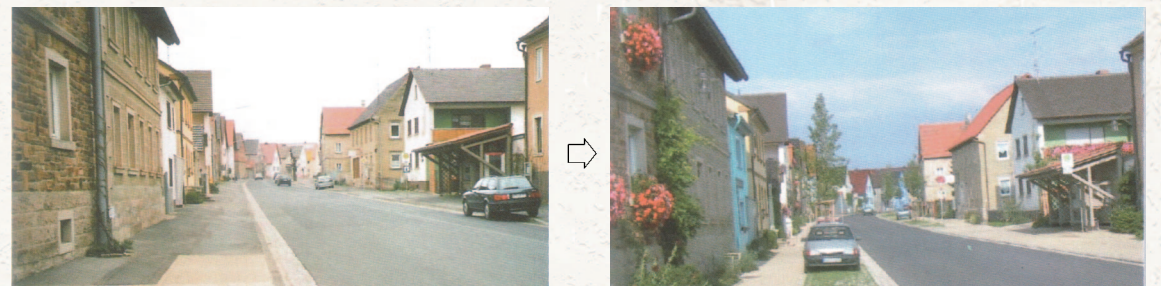
충청남도 3농혁신의 일환으로 제기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의 3년차를 마무리 짓는 시점,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마을만들기 해외연수가 진행되었다. 연수 내용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3개국을 중심으로 8박10일의 일정으로 특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유럽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둘러보고 시사점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농촌의 농업생산구조와 마을커뮤니티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상황과 여건이 다른 것은 사실이나, 근래 우리나라 농촌에서 겪고 있는 이농과 고령화 등의 현상을 유럽의 농촌에서도 동일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지 본 연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 중 주요한 몇몇 사례를 소개하고 충청남도 마을만들기가 유럽의 농촌마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딩골스하우젠(Dingolshausen) 마을재개발사업

딩골스하우젠은 독일 바이에른주에 속한 작은 지역으로 골목에 설치할 전등의 종류부터 주민 공동소유의 관광객 숙박시설 건립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자료: <http://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34>), 딩골스하우젠은 1950년 600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070여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문했던 마을은 1168년에 조성된 68가구의 작은 마을로 예전에는 100% 농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4농가만이 남아있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딩골스하우젠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마을재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현재는 2단계 마을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 총 550만 유로(공공 150만 유로, 개인 40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고 한다. 마을재정비사업 선정을 위해 1990년부터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마을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선진지 견학 등의 준비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관할 관청(지방개발사업부)에서는 5년 동안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고,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건축가 및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에서 운영중인 15개 협회와 협력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토론과 의견수렴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마을재정비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폐가 리모델링 또는 철거후 재건축, 노후주택 정비, 마을하천의 친환경 복원, 도로 정비, 공공건물 및 시설의 리모델링 등이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마을기금 등을 활용한 주민 스스로의 사업추진은 많지 않았으나, 가로변 경관(꽃길)조성 등이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각 가정마다 해당 규모에 따라 자부담을 각출하여 추진되었다고 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와인테마를 부각시키기 위해 마을 곳곳에 포도나무를 식재하였다.



딩골스하우젠 마을재정비사업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딩골스하우젠의 마을재정비사업이 현재까지 19년 여 동안 추진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수많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주민합의를 도출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과 둘째, 19년 동안 1명의 공무원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담당하여 사업추진의 유연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펜젤러(Appenzeller) 치즈공장

아펜젤러 치즈는 그뤼에르, 에멘탈과, 스브린즈 등과 함께 스위스 4대 치즈 브랜드 중 하나이며, 방 문한 아펜젤러 치즈공장은 1978년에 설립된 후 2007년에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7명의 직원에 의해 운 영되고 있는 아펜젤러 브랜드의 치즈를 만드는 공장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이다. 지역내 크고 작은 58 개의 아펜젤러 브랜드의 치즈공장이 운영 중이며, 몇몇 소규모 농가단위에서도 아펜젤러 치즈를 생산 하고 있다. 아펜젤러 치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활용하고 허브, 와인, 약초 등을 첨가하는 독특 한 비법으로 우수한 품질과 맛을 자랑하며, 58개 치즈공장이 엄격한 생산관리와 생산과정의 표준화로 품질 규격화를 유지하고 있다.

아펜젤러 치즈공장에서는 1회의 공정 당 6천 리터의 원유를 사용하여 하루 3~5회의 공정을 통해 치즈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600톤(58개 공장의 생산량을 합하면 연간 9천 톤에 달한다고 함)의 치즈가 생산되고 있다. 치즈공장은 치즈 생산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이와 함 께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견학 및 식사 등을 목적으로 연간 20~25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원유는 지역의 60개 농가로부터 매일 2만 톤의 원유를 품질검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그 중 11 개 농가로부터 유기농 우유를 공급받아(일반원유 리터당 65센트, 유기농원유 리터당 75센트에 납품) 유 기농 치즈를 생산하고 있다. 유기농 우유는 초지방분, 자연사료 사용 및 화학사료 사용불가, 항생제 사 용 불가 등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납품받은 원유는 샘플링을 3개월간 동결 보관하 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최종 생산된 치즈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통 하여 20점 만점에서 1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최고 품질의 치즈만이 아펜젤러 치즈로 유통 된다고 한다. 등록상표 아펜젤러 치즈 브랜드는 4개 칸톤(Canton, 주)에서만 사용하는 상표로 고유등록번호로 생산지, 제조일자,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여 치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생 산된 아펜젤러 치즈는 스위스 치즈 마케팅협회와 협력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60%가 해외 50여 개 국

에 수출되고 나머 지 는 스위스 국내 백화 점 및 대형마트 등에 계약 판매되고 있다.

아펜젤러 치즈는 원유생산농가, 가공 업체, 판매 및 마케팅 협회가 협력한 협 동조합 형태로 운영



아펜젤러 치즈공장(좌) 및 홍보 팸플릿(우)

되고 있으며,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는 형식이 아닌 생산-가공-판매 및 마케팅의 각 영역을 1차·2 차·3차의 조직이 각각 담당하는 6차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겐슬러(Gensler) 농가의 6차산업화

겐슬러 농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동쪽으로 50km 떨어진 포펜하우젠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은 EU에서 선정한 유기농지역이며 마을재정비사업의 우수 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포펜하우젠 마을은 10년 전 80여 농가에서 현재는 40농가로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낙농업 위주의 소농으로 구 성되어 있다. 겐슬러 씨도 1980년대 후반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귀농하여 아버지가 경영하던 낙농업의 가업을 이어 받았으나, 1985년에서 1990년대 즈음이 독일에서도 농업 부가가치가 저하되고 이농과 탈 농현상이 일어나던 시기라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방법이 감자를 생산하여 썰어서 팔거나 빵을 만들어 파는 간단 한 가공이었고, 이는 당시에 법적 규제(저축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틈새시장이었다. 그 러나 빵 판매가 증가하자 공공에서 관련된 법적규제(식품위생법 등)를 통한 제제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때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나 겐슬러 씨는 법에 순응하여 규제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 영을 전환하기 위한 뼈아픈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 다수의 농가 들이 포기를 결정하였고, 이는 농촌의 정체성 상실과 농가의 소멸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겐슬러 씨 는 소농이 농업생산 이외의 가공, 직판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20여 년 동안 기울여 왔다. 농 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빵, 소시지 등의 가공품을 생산하여 소농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의 협력 을 통해 지역에 모두 판매하는 로컬 푸드를 실현해 왔다. 생산된 빵은 치즈농가와 협력하여 호텔에 납 품하고 있는데, 호텔측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이 담긴 로컬푸드를 선호하여 오히려 농가에 빵 생 산 및 납품을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농산물 가공품을 소비하는 고객은 대부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이 지만 절대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농장(빵 만들기, 음식만들기, 농업·농촌 체험 등)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지불금액만큼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적 소비와는 달리 농가 체험 및 직판을 통해 상품과 가치를 동시에 판매한다는 겐슬러 씨의 철학에서 기인한 결과이며, 실제 많은 방문객과 도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겐슬러 씨 농가에서는 현재 10명의 지역주민 이 고용되어 농산물 직판과 체험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겐슬러 씨 농가와 같은 직판과 체험을 운영하는 4~5농가와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문객의 휴식과 휴양의 수요에 대응하여 인디언 천막을 활용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투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호텔보다 방문객의 호응도가 높아 연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숙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체험방문객은 가족단위도 많지만 학생들이 주를 이루며 유럽 전역에서 연간 100~150학급이 방문하 고 그 외의 외국학생은 교환프로그램 등에 의해 연간 10개 학급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학급당 학생 수: 20~30명), 세미나 등 그룹 방문객도 연간 300명~4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별 도의 홍보프로그램은 없으나, 정책적으로 학교 학급당 15,000유로 정도의 지원을 통해 농가방문 및 체

힘을 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체험객 유치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그 외에 방문한 도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이 방문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체험프로그램은 활쏘기(사냥) 등 자연체험, 팻감잡기 및 불피우기, 빵굽기 및 스스로 음식해먹기, 숲산책, 캠핑 등 자연에 규칙이 있음을 보여주는 배우는 자연생태프로그램,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 강화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농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겐슬러 씨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단계별 사업추진이다. 겐슬러 씨의 경우 공공의 보조금을 단시간에 큰 금액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곧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고 있다. 유럽의 경우 단기간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 후 5년간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와 상황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작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가능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 단계씩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공공 및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 겐슬러 씨의 경우, 빵 구울 때 발생하는 잔열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고자 할 때 이것이 법적 규제로 문제가 되었지만 공무원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규제완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인디언 호텔의 경우도 공무원의 협력에 의해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즉, 농가의 움직임과 수요 변화를 이해하고 판단하여 길을 열어주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러한 공공의 이해와 협력이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겐슬러 농장의 홍보 팸플렛

레오강 Herzog 농가민박

레오강(Leogang)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 아래에 자리 잡은 인구 3,000여명의 작은 농촌마을로 산악 스포츠와 겨울철 스키 등을 즐기기에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휴양마을이다.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Herzog 농가는 1400년대에 건축한 농가주택에 8대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과거 대가족 문화의 유산

으로 만들어진 10여개의 방 중 8개 방을 민박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가주택 건물자체가 하나의 문화재라 할 수 있으며, 민박을 위해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실내장식과 깨끗한 인테리어를 엿볼 수 있다.

민박은 1년 중 2주(Herzog 농가 가족여행)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8개 방 모두 숙박 객으로 만원을 이루며, 숙박료 1인당 원화로 45,000원에 방당 2명씩 16명이 300일 정도 숙박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박 운영을 통하여 연간 2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Herzog 농가민박을 찾는 방문객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휴양하거나 트레킹, 스키 등을 즐기기에 위해 찾고 있으며, 민박이외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승마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외의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농업·축산업과 민박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창출). 레오강 마을에는 Herzog 농가 이외에도 180여 농가에서 민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및 지역단위의 민박협회를 통해 소방, 위생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Herzog 농가는 민박 외에 23ha에 달하는 목축업(소 28두, 돼지, 닭, 토끼 등)을 운영하고 옥수수 등의 발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2일 간격으로 우유를 납품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족 4명(부모 2명, 딸 내외 부부)이 감당하고 있는 유럽 가족농의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Herzog 농가 1년 전체 소득: 60만유로, 약 8억 여 원). 목축업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방목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실내사육하고 있으며, 주로 계약생산을 통하여 인근 호텔 등에 옥수 1두 당 2,000유로 정도에 납품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유기축산 운영을 통하여 축산분뇨는 전부 퇴비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축사 관리가 잘 되어 민박과 인접하여 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나 혐오물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민박 객에게 가축체험 등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다.

방문한 일행이 이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Herzog 씨는 농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들어내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과 도시지역 못지않은 문화수요 충족으로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있으며 자손까지 농업을 가업으로 이어주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마을로부터 15km 인근의 중심지에서 영화, 유흥 등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승마, 스키, 트레킹 등의 다양한 취미생활을 지역 내에서 즐기고 있다고 한다.



Herzog 농가민박 외부(좌) 및 내부(우) 모습

시사점

유럽의 농촌마을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특이점 중 하나는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이다. 우리나라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이 주를 이룬다면 유럽은 마을 보다는 공간의 경계가 없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침체되어가는 농촌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수많은 마을단위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목해야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단계별 사업추진과 공공의 역할을 중요하게 들 수 있다. 유럽의 성공한 마을의 경우도 대부분 다년간의 시행착오와 노력에 의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농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공공의 지속적인 파트너 역할이 중요함을 유럽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의 농업 6차산업화의 사례에서도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역의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조직의 협력을 통한 6차산업화의 형태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6차산업화의 형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에 있어 하나의 농가가 농산물도 생산하고 가공뿐만 아니라 판매, 농촌체험까지 담당하는 개별농가 중심의 6차산업화는 사례지역인 겐슬러 농가와 같이 정착하기에 20여 년에 이를 정도로 다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라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펜젤러 치즈공장은 지역의 농가와 가공업체, 전문 마케팅 조직이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6차산업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겐슬러 농장처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농산물의 상품이 아닌 가치를 판매하는 마케팅전략이다. 즉,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자는 건강한 먹거리와 가치를 팔고 대신 소비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마케팅전략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유통 문제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농가민박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문화·전통, 자연자원 등 지역과 농가의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농가민박을 위해 새롭게 주택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기존 농가주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지역의 휴양자원과 연계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무분별한 소모적 농가민박의 육성이 아닌 단지 농가의 잠재자원을 극대화 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과도한 H/W사업에 집중한 우리나라에 시사 한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가민박의 경우 축사의 악취와 혐오물질 등으로 축사농가는 민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유럽의 경우는 오히려 친환경 유기축산을 통해 가족체험 등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가족단위 특히 여성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장식 등으로 고객 지향적인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서론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다. 혐오시설이란 말이 좀 감정이 담긴 용어라면, 좀 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비선호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쓰레기를 만들어서 배출하지만, 누구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주변에 오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혹자는 다이옥신까지 포함해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는 기꺼이 태워서 연기를 몸 안으로 빨아들이거나 사망확률이 소각장보다 훨씬 더 높은 자동차는 기꺼이 타면서 왜 쓰레기 처리시설은 위험시설로 극히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위험의 수용에 대한 자발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즉, 흡연이나 자동차의 위험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쓰레기 처리시설은 외부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주어진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쓰레기 처리로 인한 편익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만 쓰레기 처리로 인한 비용은 쓰레기 처리시설 인근의 주민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이란 경제학적인 좁은 관점보다는 절차와 내용의 문제까지 폭넓게 바라보는 환경정의의 관점도 있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의 문제는 절차의 공정성, 즉 주변주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거쳤는지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과정이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지에 집중되는지 여부 등까지 골고루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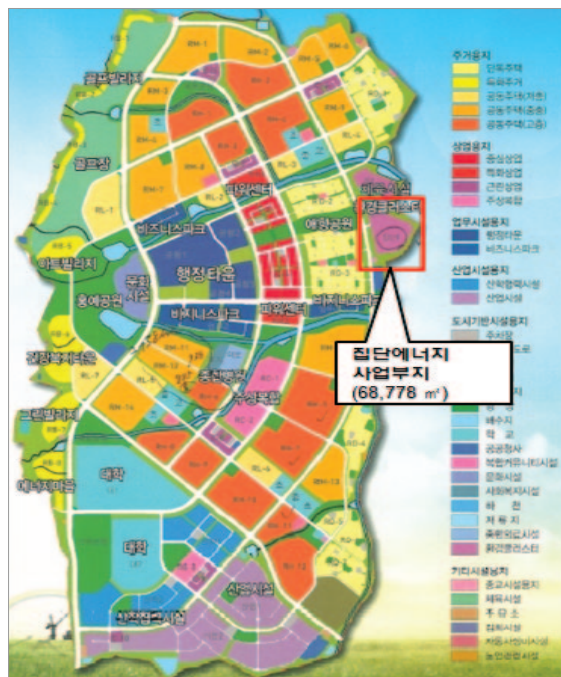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는 쓰레기 처리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우선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악취나 오염물질,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오염방지기술 및 공정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 십년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둘째, 쓰레기 전처리를 통하여 쓰레기의 직접 처리라는 외양을 탈피하고자 한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고형연료 또한 '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형연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 시설관련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민갈등의 원인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불안감, 편익은 신도시 입주주민이 받지만 피해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받는다는 문제의식,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었다는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적인 주민갈등은 집단에너지 시설 최근접 지역인 신도시 입주주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신도시 입주주민 주민은 조속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주변 지역의 농촌지역 주민은 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신도시 입주주민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이 부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고에서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농촌지역 주민들(홍성군 홍북면 주민들과 예산군 삽교천 지역 주민들)의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양상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그림 1〉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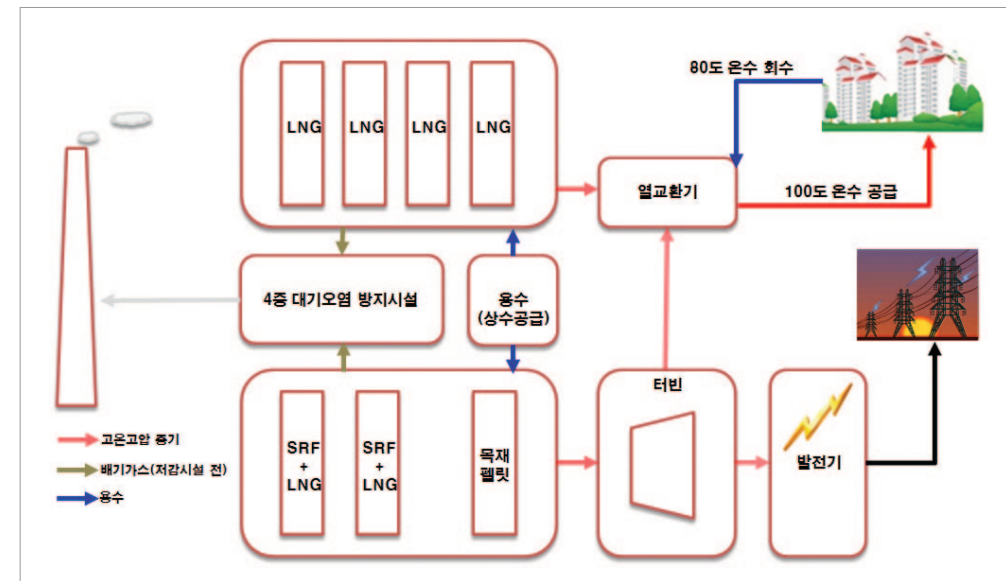
2.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개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은 내포신도시에 입주할 가구 및 충남도청 등 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에너지 공급 및 발전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업시행사는 내포그린에너지(주)이며, 한국남부발전(주), 롯데건설(주), 삼호개발(주), 삼호환경기술(주), 하나대투가 사업시행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는 크게 LNG와 기타(SRF와 목재펠릿)로 구분된다. LNG열전용보일러 4기를 통해 전체 에너지의 68%를 공급하고, SRF 보일러 2기를 통해 22%, 목재펠릿 보일러 1기를 통해 10%의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을 가

지고 있다. 세부설계 및 열량계산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SRF 보일러 2기에서 사용하는 SRF의 양은 일 400톤 ~ 50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SRF 보일러 및 목재펠릿 보일러는 단순 열공급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를 통해서 전력(현행 법에서는 SRF 및 목재펠릿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됨)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림 2〉 SRF 및 목재펠릿 보일러의 전력 생산 과정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애초에는 홍성군과 예산군, 내포신도시 등 인근 시·군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고형연료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2011년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고형연료 사업이 환경부의 국고지원 철회 등으로 무산되면서, 인근 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고형연료 사업에서 현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폐기물까지 포함한 고형연료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현재에도 홍성군 등 인근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공급할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인근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고형연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고형연료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SRF를 연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SR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검토해 보자.

3. SRF에 대한 이해

SRF는 “Solid Refuse Fuel”의 약자로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폐기물 고형연료라고 하기도 하며, 줄여서 그냥 고형연료라고 하기도 한다. RPF나 RDF 등 여러 가지 다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가공한 연료는 모두 SRF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SRF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며 다양하다. 첫째, 폐기물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현재 주민들 역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을 원료로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SRF는 탈 수 있는 쓰레기를 물리적으로 선별·파쇄 등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LNG 등 정제된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둘째, 폐기물에 기원하기는 하지만, 선별·파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침으로써 단순히 폐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료라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SRF의 중금속 함량 등 연료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선별·파쇄 등의 공정을 거친 물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상의 쓰레기가 뒤죽박죽으로 섞인 혼합폐기물에 비해 열량과 오염물질 함량이 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태울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이 혼합폐기물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모두 일면의 사실을 포함한 관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한쪽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지만 진실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다.

첫째, 폐기물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정제된 화석연료에 비하여 많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청정하고 깨끗한 연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각시설에 준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오염방지법에서도 SRF 연소시설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에 준하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둘째, SRF와 일반 쓰레기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SRF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별 및 파쇄 공정 등을 거치기 때문에 혼합폐기물에 비해서는 같은 시설에 태운다고 할 때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것이다.

SRF는 탈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이다. 어차피 처리해야 할 쓰레기라고 한다면, 매립하기 보다는 우선 소각하여 부피를 줄이는 것이 낫고, 소각하고자 한다면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것이 낫다.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고자 한다면, 단순 소각방식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보다는 선별·파쇄 등의 가공을 통해서 연료로서의 품질을 높여서 소각과 비교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게 회수하는 것이 낫다.

4.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반대논리에 대한 검토

첫째,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시에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는 법적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개별난방을 하는 것에 비해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기오염 방지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조금 극단에 치우친 주장이다. 이미 개발되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에너지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자체는 인정하되, LNG를 100%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내포신도시에 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LNG를 100%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내포신도시를 계획할 당시부터 고형연료를 일정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00% LNG 사용으로 되돌리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압 LNG를 이용하여 난방 및 전력생산을 같이 해야 하지만 고압 LNG 공급망 구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저압 LNG 공급망은 현재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압 LNG를 이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현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충남도

청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할 경우에는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지금까지 국내에 SRF를 연소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SRF 연소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과 같은 대형 SRF 연소시설에 대한 국내 사례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과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의 양천구 소각시설(400톤/일 규모)이나 강남구 소각시설(900톤/일 규모), 노원구 소각시설(800톤/일 규모) 등은 모두 20년 가까이 운영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혼합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SRF 연소시설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시설의 장기 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대신해서 지역 자원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다.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드는 것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남과 시·군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하여 진심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 주관으로 민관 정책간담회와 정책간담회 산하의 T/F팀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본다.

5.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주민 갈등 해소방안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문제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



는 폭이 매우 협소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LNG 대안을 선택하기에는 사업진행이 너무 많이 되었다. 주민들이나 지역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사업자가 벼랑 끝 전술을 택하고 있다는 불쾌감이 들 수 있다. 필자역시 사업진행 초기에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사업자를 일벌백계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모든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집단에너지시설에서 SRF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면 SRF 사용을 철회하고 LNG 100% 사용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SRF 사용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비하여 사업계획을 철회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문제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집단에너지 설치가 예정대로 되지 않아 내포신도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의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의 SRF 사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설명이 필요하다. 오염물질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자체나 사업자가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부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충남도청 주관으로 다시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역주민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며, 환경오염 피해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밝혀질 경우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업자의 의지와 약속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내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상호협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금지급 등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서로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을에 대한 공동사업도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측정과정을 공개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공개와 지역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출입과 감시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지역언론 및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분노, 우려 등은 살피되,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 내부의 민민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대규모 시설입지를 둘러싸고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내부갈등으로 지역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은 슬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업지연에 따라 불어나는 비용 때문에 초조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 역시 초기부터 주민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일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다. 다시 말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수 밖에 없다.

6. 결론

국내 SRF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SRF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보일러 시설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SRF 사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SRF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방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SRF사용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순환 산업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원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SRF산업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다. 따라서 SRF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개발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SRF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환경부의 SRF에 대한 일관된 정책추진도 필요하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문제발생 원인 중 하나도 환경부가 국고지원을 전제로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계획을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SRF사용을 불가하고 LNG로 전량 공급하도록 한 권고한 모순적인 태도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지핀 원인 중의 하나이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주민갈등의 전개와 해결과정(물론 해결될 수만 있다면)은 다른 지역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민반대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 및 지역언론, 환경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은 갈등해결

을 위한 좋은 모델사례가 될 것이다.

반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주민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파국을 맞게 된다면(물론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업계획 초기부터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없을 경우 주민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증폭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인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로나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사업자, 지역주민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 대화를 통한 해결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흐름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인 해외관광 유감



권오덕
전 대전일보 주필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대부분 등산패션 일관
한국인 찾으려면
등산복 입은 사람 찾으면 돼
교회 성당 사원 등지에서선
재킷을 입는 게 예의
1주일 이상 함께 여행해도
대부분이 인사 없어
신분과시로 없앴다지만
간단한 자기소개는 필요

올해 한국인들의 해외여행비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거라는 보도다. 지난 9월말 통계를 보면 한국의 해외관광객 지출액이 217억 달러(22조 7000억 원)인데 비해 일본은 우리보다 겨우 1억 달러 많은 218억 달러(22조 8000억 원)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이 일본을 뛰어 넘었을 게 확실하다. 더욱이 일본 인구가 1억 3천 만 명으로 5000만 명인 한국의 2.6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우리의 4배를 웃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총 여행비가 일본은 382억 달러, 우리는 124억 달러로 격차가 컸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민들의 해외여행욕구가 높아진데다 원화 강세에 힘입어 더욱 급증추세

에 있다. 반면 일본의 여행객감소는 지속적인 엔화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의 해외 여행객들은 막 은퇴한 50대 후반과 60대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젊은이의 비중이 높아져 연령의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은 크게 늘고 있으나 매너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글리 코리아'의 오명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관광지에서의 무질서와 고성, 식당에서의 시끄러운 행위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거기에 더해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의 지나친 쇼핑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반말 짓거리를 예사로 하고 지나친 음주로 말썽을 빚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실태를 생략한다.

다만 최근 드러난 그릇된 해외여행 매너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인 등산복 차림이라는 점이다. 여행하는데 정장차림만으로 나설 수는 없고, 간편한 차림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공부나 특별한 자리라면 모르되 순수한 관광이라면 편한 차림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한국 사람이 해외여행 갈 때 장소나 때에 관계없이 무조건 등산복차림이라는 데 있다. 한국인을 찾으려면 등산복 입은 사람을 찾으면 된다고 할 정도다.

등산패션은 해외여행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세다. 산과 바다, 유원지는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과 고궁, 미술관과 심지어 음악회까지 등산복차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식당은 보통이고 심지어 상가와 결혼식장까지 점령할 태세

다. 전천후 일상복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렇다 보니 아웃도어업계는 웃음꽃이 피었다. 올해 매출액이 7조원을 넘을 것이 예상돼 미국에 이어 매출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3년 이후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까지 등산복을 자주 입는 걸까? 우선 입기 편하고, 주름이 가지 않아 오래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요즘은 기능성이 좋아져 더욱 편리해졌고, 또 색상도 더욱 다양해져 당당한 패션의 위용을 뽐낸다. 등산패션의 획일화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아무리 편하고 실용적이라 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한다. 야외에서는 그렇다 치고 성당이나 사원, 박물관, 연주회나 미술관 등에서는 재킷이라도 입는 게 좋을 것이다.

둘째, 여행자끼리 인사 없이 여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몇 해 전만해도 국내공항에서 출발하기 직전 상호 인사시키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최근엔 여행지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가 나와도 상호인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는 크게 잘못된 행태다. 패키지여행은 보통 20~30명에서 많으면 40여명 정도 되는데 여러 여행객이 섞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 인사가 필수적이다.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며칠간 서로가 서먹서먹해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필자는 지난봄에 미주지역, 늦가을에 터키를 9일 일정으로 동창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모두 패키지여행으로 미주지역은 16명, 터키는 24명이 참가했고, 6명 이상 되는 팀은 없었다. 여러 지역에서 여러 팀이 참가해 모르는 사람이 대부

분이었다. 서로 자기소개나 인사를 필요로 했지만 인사를 시키지 않아 가이드에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느냐”고 문자 펄쩍 뛰는 것이었다. “요즘은 그런 것 안 시킨다”고 말했다. 자칫 잘못하다간 분위기를 깨기 쉽다는 것이었다.

“왕년에 내가 어느 요직에 근무했다느니”하며 자기과시를 하는 사람이 적잖아 여행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행객은 정년퇴임이나 은퇴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자기과시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어디에서 온 누구라거나, 구체적인 직업 직위 대신 공무원이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소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됐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인사소개를 안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행을 시작한지 며칠 지나면 서로가 눈인사 정도는 하겠지만 그때까지가 여간 서먹서먹하지 않다. 어디에서 살고 간단한 자기소개는 해야 같이 앉아 식사하거나 담소를 해도 어색하지가 않다. 사실 이는 여행사 가이드의 몫이기도 하다. 자기과시를 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 시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행태를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서울의 훈수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번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있었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놓고 사회적경제의 범주설정·기금 조성여부 등에서 찬반 토론이 활발하였으나 법제정의 필요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기초 자치단체 지원인프라 조성시 국고 보조나 사회적경제 상호공제조합 구성 근거 마련 등 보완과제도 발견되나 다양한 정치집단에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 본다. 이러한 분위기는 금번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구청장 당선자의 60%가 사회적경제의 지역 생태계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고무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충남에서 2010년 말 선도적으로 형성해 온 담론인 바 충남이 자

부심을 갖고 지역형 정책모델을 계속 개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말 기존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단기육성 정책’을 폐기하였다. 대신에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협동경제 기반구축 및 민관협력, 커뮤니티 공유자산 형성을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간접지원 정책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최저가 조달원리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조달로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도 사회적경제에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중이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서울시의 ‘부채 7조원 절감’ 시정하에 추진되면서, 전임 시장 재임기 보다 30%나 감액된 사회적경제 예산으로 227% 성장한 기업

지원과 자치구별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중 이어서 재정 효율성 측면도 제고되고 있다는 점 이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울시 및 서울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추구해온 전략은 '시민사회 자 조와 협동 역량 강화'로 시민사회 안에서 우선 해법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민선6 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상호거래 등 경제적 연대의 경험이 부족하고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네트워크 를 통한 자조기반 구축도 초기단계인 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업화 촉진과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선, 사회적경제 당사자협의체와 중간 지원조직 그리고 서울시 행정과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지난 3년간 공동 의 정책생산과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협동화 사업비 지원 과 당사자협의체가 주도하는 peer consulting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문별 조직화율도 크게 높아졌고 수익 공동적립 기금조성 등도 제기되 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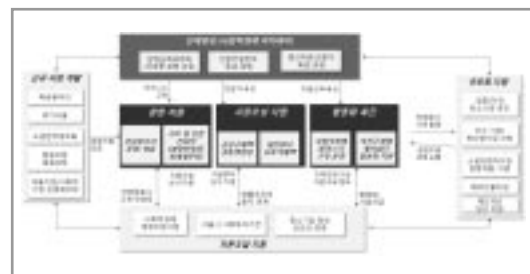
다음으로 충남에서 기획되었던 기초 지자체별 특화사업 지원사업이 서울에서도 제안, 집행되 면서 16개 자치구에 지역생태계조성사업이 추진 되며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기반을 조성중이다. 도심형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진 서울에서 패 션·관광업의 기초가 되는 영세 봉제업체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재조직하여 공동 영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 금천과 성동 지역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림 1〉 서울형 제조업 밀집지역내 사회적경제 연계 사례

또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통합적 경영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자본조달 측면에서 는 5백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외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특 별보증제를 도입하였다. 창업기에 집중되었던 지원정책을 기업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으 로 전환중인데,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로드맵 개발과 액션러닝형 교과과정 20종 개발 보급, 우수 사업체의 확산을 위한 쇼셜프 랜차이즈 매뉴얼 개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생 산물을 패키징한 도시형꾸러미 '햇음' 및 광화 문 광장을 개방한 시민장터 운영과 자치구별 공 유장비 지원, ,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 및 공급역 량 조사와 판로촉진을 위한 공동영업단 등을 운 영중이다.



〈그림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간 연계도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자산 조성 및 공공자산 활용전략은 충남에서도 꼭 추진해보기를 기대하 는 신전략사업이다. 영국의 로컬리티 등이 주력 하고 있는 유희 공공자산의 지역시민 경영 즉, 자산화전략은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지속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 감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커뮤니티가 계속 이용 가능한 공유자산 을 만든다는 점에서 필히 도입될 필요가 있는 지원전략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자체가 보 유한 유희 부지나 건물에 대해 사회적경제클러 스터로 조성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 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은 평 · 성북이 개장하였고 영등포 · 노원 · 양천 · 동 작 등이 공사중에 있다.



〈그림 3〉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형성 지원 : 사회적경제클러스터 조성 지원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재부족 문제해결 과 지원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 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력 제고의 과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이러 한 고민과 과제는 충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최근들어 추가적으로 시 도하고자 계획중인 몇가지 과제를 공유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경영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가와 전문 지원인력, 임노동의 문화에서 협동노동의 문화로 자기혁신을 꾀하는 사회적경제 노동자들 을 위한 인재양성의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아울러 청소 년기부터 협동경제를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과 협조하여 중고등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의 구심이 될 공유형 경제기반(기금, 배송물류망, 협동생산기 지)의 조성에 지원사

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 생협이 지역 경제 유통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의를 이 끌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영향력이 크고 규모있는 공동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가운데 시 민적 지지도를 높이고, 위기 상황의 골목경제 주체들(자영업자, 전통시장, 동네의원 등)이 창 업하는 신생협동조합 지원과정에 충남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적극 결합되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對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1위 명성 지킨다

— 11월 26~29일 베이징 식품박람회서 53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충남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중국 베이징식품박람회'에 도내 8개 업체가 참가해 총 53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미국, 태국, 영국 등 26개 국가 526개 전시업체가 참가하고 2만 2000명의 전문 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및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8개 업체를 선정, 올해 베이징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했다.

도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조미김, 홍삼, 두유, 젓갈류, 주류 등 도내 8개 업체의 10개 품목으로 구성된 충남도관을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도 상해사무소 관장이 현장에서 도내 업체의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금산에 소재한 한인홍(주)의 임재화 대표는 중국 내 인삼 수출시장을 그동안 홍콩, 상해 등 남방지역 중심에서 북경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현지 약국체인점과 수출계약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보령 갯바위식품(주)의 김영진 이사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조미김

과 신규상품으로 개발한 유아용 김 제품을 내세워 중국 현지 2개 업체와의 수출계약 체결을 눈앞에 뒀다.

천안 삼육식품(주) 김기완 팀장은 최근 유아용 두유, 과자 등 한국산 유아 제품에 대한 중국 일반 소비자의 관심에 힘입어 현지 바이어의 주문량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훈 도 농산물유통과장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심비디움, 밤, 인삼, 조미김 외 유아용 간식, 분유, 우유 등 수출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 내륙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9359만달러 규모로, 전국 도 중 수출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충남 20년 역사 e-book으로 만나보세요

— 도정신문 전자책 발간 1994~2013년까지 충남도정 자료 한눈에



#1. 20년 전...

천안군, 공주군, 아산군, 서산군, 보령군...

젊은 세대들은 '어디 지명이지?' 하며 의아해할 것이다. 하지만 20년 전 오늘 충남지역에 존재했던 기초단체 지명이다. '참! 옛날에 그랬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추억에 잠길 것이다.'

#2. 10년 전...

"충청도민 단결하여 신행정수도 사수하자"

2004년 10월 정부가 추진해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됐다.

충청지역민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촉구하는 쉼기대회를 갖는 등 행정수도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군 일원에 제2의 수도건설이 이뤄졌다

(중략)

지난 20년간 도정의 역사가 총망라된 전자책(e-book)이 발간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신문 형태로 발간되고 있는 '도정신문'을 언제 어디서나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권의 전자책(onebook.adevent.kr)으로 발간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전자책에는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충남지역의 굵직굵직한 도정사 및 지역소식,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용량은 신문형태로 무려 8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 데이터들은 책갈피, 본문 검색, 원문 확대·축소, 다운로드 및 복사, 인쇄 기능이 탑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다.

주소는 충남넷(chungnam.net)이나 네이버에서 '충남도정신문'을 검색해 들어가면 된다.

이윤선 홍보협력관은 "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도정신문 역사는 도시(道史)이자, 충남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에 열린교육타운이 조성된다

— (가칭)홍성신리초 어린이공원 복합커뮤니티 시설 통합설계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홍성신리초등학교의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

충남도교육청은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2015년 3월까지 학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특화·충실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특화·충실화 프로젝트는 도와 도 교육청,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기인 운영체 경희대 교수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초등학교와 공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해 이용자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당선작은 흥성신리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주 이용자인 학생 편의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가칭)흥성신리초등학교는 내포신도시 내 1만 3000㎡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초등학교 교사동과 다목적 강당 및 시청각실, 유치원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지난 11월 20일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2015년 6월 착공해 201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가칭)흥성신리초를 시작으로 내포신도시내 설립될 모든 학교는 열린 교육타운으로 인근에 공원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배치해 풍부한 녹지와 함께 쾌적하고 수준 높은 에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흥성신리초등학교 에듀타운 조성을 계기로 내포신도시 내 교육환경이 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비전·발전계획’ 밑그림 그린다

－ 연구용역 본격 착수…해양수산 관리·이용·개발 방향 등 모색

충남도가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1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책

자문위원과 서해안비전 기획단 등 전문가와 공무원, 용역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의 해양수산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이용·개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한다.

또 서해안비전을 중추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각종 국가계획 및 정책에 반영,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있다.

내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공간적 범위를 바다를 접하고 있는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키로 했다.

시간적 범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2017년까지 단기계획, 2020년까지 중기계획,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나눈다.

연구용역 내용은 ▲국내·외 해양수산 산업여건 변화 및 전망 ▲도내 해양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특성조사 ▲도 해양수산 정책의 활용도 및 차별화 전략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또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도출 및 시행전략 수립 ▲해양수산 발전계획의 정책효과 분석 ▲해양수산 기반 지역혁신전략 수립 ▲종합 발전 방안 로드맵 등도 연구용역을

통해 찾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기관의 사업 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 수행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013년 7월 해양수산물 수출 촉진과 함께 비전으로 ‘해양 건도 충남, 환경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를 제시하며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해양과 항만, 수산, 해양레저 등 해양수산분야 정책 및 사업의 방향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한·중 FTA 피해 최소화 전략 마련해야”

－ 충남발전연구원, 한·중 FTA 대책 마련 리포트 발간

충남도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로 인한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더구나 중국은 충남 제1의 교역국으로써 향후 대처방안에 따라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농업, 수산업, 지역경제, 지역발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한·중 FTA 특집 ‘충남리포트’를 지난 11월 26일 발간했다.

△ 김양중 책임연구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에 힘써야”

지난해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217억불(70.2%)을 수출한 전자전기제품이며,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 54억불(17.4%), 기계류 21억불(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1위 품목 역시 전자전기제품으로 8억불(24.7%)을 수입하였고, 이어 농림수산물 5억불(15.8%), 화학공업제품 5억불(15.6%) 등이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충남의 교역비중으로 볼 때, 전자전기제품은 전국보다 수출비중도 매우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현지화와 ITA협정(정보기술제품 무관세 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져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충남의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수송기계) 역시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해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흑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의 수입적자 품목인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등은 이번 한·중 FTA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가격과 수입산 철강가격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섬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저가 섬유 시장이 중국산으로 대체되어 경쟁

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중저가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 대부분이 국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섬유수입에 대응할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연구원은 “한·중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산지인증, 사후검증 등 지속적인 활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하고, 기술지원, 투·융자지원, 거래선 확보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충남의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 확대와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중소기업이라도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FTA 규정 해석 등 전반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강마야 책임연구원 “충남 농정의 구조적 체질 개선 필요”

강마야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실질적 타결 내용에서 농축산물 분야가 선방했다는 낙관적 전망은 시기상조라면서” 농업분야는 FTA 타결 이전부터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타결내용 외형만 봤을 때,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은 양허 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품목 등 1,063

개 품목(66%)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 제외,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우리 신선농축산물 품목 1,030개 품목(91.1%)은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FTA의 쟁점으로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발작물 생산기반 위축과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그리고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 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등을 거론했다.

강 연구원은 “앞으로 충남은 단기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발작물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FTA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기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과 중국의 농축산물 육성 전략 등 최근 정보와 동향 파악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 김종화 책임연구원 “충남 대표 수산물 보호 전략 마련되어야”

이번 한·중 FTA에서는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를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충남 대표 수산물의 대부분은 초민감 또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발

효 이후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보다 저가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고 갯벌어업이 성행하여 중국 수입 수산물과 교차되는 품목이 많아, 그에 따른 영향 관계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 충남은 김, 해삼,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해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 중국 수출물량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남의 주요 수산물인 바지락은 현재도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굴과 김, 꽃게(냉동), 낙지 등은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양허 제외된 김, 해삼, 멸치, 넙치 그리고 냉장 꽃게 등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연구원은 “다만 충남의 특화 수산물인 주꾸미, 전복, 전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수산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FTA 타결에 따른 수산업 분야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국 수출전략품

목 육성’, ‘어촌 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은 김, 해삼, 전복 등을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면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계획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경철 책임연구원 “한·중 FTA,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편 박경철 연구원은 “이번 FTA는 경제적 협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깝다.”면서 “이는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협력체를 한국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중 FTA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득실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지역 발전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한·중·일 FTA 타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한국과 일본 경제를 포섭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세부 품목에 대한 영향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접한 신흥 자유무역구의 발전 전략 등 인근 지역의 대응방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중 FTA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특히 서산시 대산항과 신동성 룡청시 룡연항(龍眼港) 간 여객선 취항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문화의 복원과 제주도·서울시와는 차별화된 대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고, 충남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프로젝트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하반기 봉사활동 실시

지난 10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은 농번기를 맞아 충남 농촌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서별 특성을 감안해 농촌 농업연구부를 중심으로 홍동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환경생태연구부 등은 금산 천내습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 충남발원은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모두 모여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 또는 연합으로 뭉쳐 각각 봉사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 본격 가동

— 도내 중국관련 전문인력 부족한 시·군에 활력 기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이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중국연구팀’을 꾸려 운영한다고 10월 14일 밝혔다.

10월부터 업무에 들어간 ‘중국연구팀’은 미래전략연구단 소속의 총3명으로 도내 지역발전전략사업을 중국과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초 조사 연구와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對)중국 교류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중국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내지 못했던 도내 시·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중국관련 연구들은 중국 현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하다보니, 심도깊은 연구내용과 정책대안의 실천성 등이 충분치 못하다는 분석이다.

충남발원 박인성 중국연구팀장은 “2013년 충남도의 대(對)중국 수출의존도는 47%로, 전국 평

균 수준인 26%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여기에 중화경제권에 속하는 타이완과 홍콩까지 합하면 65%에 달한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수반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對)중국 전략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발원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중국연구팀’은 중국에 대한 연구능력이 국내 지방연구원은 물론 국책연구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팀장인 박인성 연구위원은 중국인민대학 박사(경제학)로 국토연구원 중국지역연구 담당과 중국내 명문대학인 저장(浙江)대학 도시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이외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베이징(北京)대학 박사(사회학)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홍원표 책임연구원은 베이징대학 박사(지리학)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연구원 등에서 중국연구를 담당한 전문가이다.

충남발원 강현수 원장은 “앞으로 이 팀은 중국내 교류 대상지역인 성(省), 시(市)·현(縣)의 현황과 주요 발전전략 등을 조사·분석하여 충남도 및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미 충남도는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해 ‘서해안 비전’을 선포했고,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인적 부분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고 발표한 만큼 ‘(가칭)충청중국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면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

